

2025년 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3.

외교통일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4
가. 국내반	4
나. 재외공관반	6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8
6. 주요감사 실시내용	11
가. 외교부 소관	11
나. 통일부 소관	103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129
라. 재외동포청 소관	131
7. 증인·참고인 명단 및 주요 신문내용	134
8.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151
가. 외교부 소관	151
나. 통일부 소관	177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180
라. 재외동포청 소관	181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25. 10. 13.(월) ~ 10. 28.(화) 【16일간】

3. 감사대상기관

국 내	재외공관(33개 공관)
가. 외교부	(아주반)
나. 통일부	① 주필리핀대사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② 주일본대사관
라. 재외동포청	③ 주중국대사관
마. 한국국제협력단	④ 주상하이총영사관
바. 한국국제교류재단	⑤ 주캄보디아대사관
사. 재외동포협력센터	⑥ 주베트남대사관
아. 한·아프리카재단	⑦ 주태국대사관
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⑧ 주라오스대사관
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미주반)
	① 주미국대사관
	② 주유엔대표부
	③ 주뉴욕총영사관
	④ 주토론토총영사관
	⑤ 주페루대사관
	⑥ 주브라질대사관
	⑦ 주아르헨티나대사관
	⑧ 주칠레대사관
	⑨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⑩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⑪ 주밴쿠버총영사관
	⑫ 주시애틀총영사관

	(구주반) ① 주네덜란드대사관겸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② 주독일대사관 ③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④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⑤ 주룩셈부르크대사관 ⑥ 주덴마크대사관 ⑦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⑧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⑨ 주모로코대사관 ⑩ 주튀니지대사관 ⑪ 주튀르키예대사관 ⑫ 주이스탄불총영사관 ⑬ 주레바논대사관
--	--

구 분	대상 기관	관련 근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한·아프리카재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4. 감사반의 편성

가. 국내반

○ 위원 21인

○ 감사기간 : 3일간 【10.13(월), 10.14(화), 10.28(화)】

(○ : 위원장, △ : 간사)

감사반장	외교통일위원장	○ 김 석 기 (국민의힘)
감사위원	외교통일위원	△ 김 영 배 (더불어민주당) 강 선 우 (") 김 상 욱 (") 윤 후 덕 (") 이 용 선 (") 이 재 강 (") 이 재 정 (") 조 정 식 (") 차 지 호 (") 한 정 애 (") 홍 기 원 (") △ 김 건 (국민의힘) 김 기 웅 (") 김 기 현 (") 김 태 호 (") 송 언 석 (") 안 철 수 (") 인 요 한 (") 김 준 형 (조국혁신당) 이 춘 석 (무소속)

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전문위원(이사관) 행정실장(부이사관) 입법조사관(부이사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주사) 행정관(행정주사) 주무관(행정주사) 주무관(사무주사) 주무관(사무주사보)	곽 현 준 김 사 우 김 형 진 이 주 연 이 규 희 김 진 선 남 정 희 조 가 영 노 세 현 박 철 호 안 미 옥 유 승 연 전 진 향 강 금 란 채 정 현
	속기주사(3인)	김 나 미 유 준 호 김 밀 알
	보좌관 (21인)	
	정책연구위원(1급상당)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김종수(더불어민주당) 오용희(국민의힘) 박지훈(더불어민주당) 신나리(국민의힘)

나. 재외공관반

□ 아주반

- 위원 8인, 직원 3인
 - 감사반장 :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
 - 감사위원 : 윤후덕 위원, 한정애 위원, 홍기원 위원(더불어민주당)
김기웅 위원, 송언석 위원, 인요한 위원(국민의힘)
김준형 위원(조국혁신당)
 - 직 원 :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외 2인
- 감사기간 : 10일간 [10월 15일(수) - 10월 24일(금)]
- 대상공관(8개 공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 미주반

- 위원 6인, 직원 3인
 - 감사반장 : 김영배 위원(더불어민주당)
 - 감사위원 : 강선우 위원, 김상욱 위원, 이재강 위원, 이재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위원(국민의힘)
 - 직 원 : 김형진 행정실장 외 2인
- 감사기간 : 11일간 [10월 16일(목) - 10월 26일(일)]
- 대상공관(12개 공관)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주페루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밴쿠버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 구주반

○ 위원 6인, 직원 3인

- 감사반장 : 김 건 위원(국민의힘)
- 감사위원 : 이용선 위원, 조정식 위원, 차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위원, 안철수 위원(국민의힘)

- 직 원 : 감사우 전문위원 외 2인

○ 감사기간 : 10일간 [10월 16일(목) - 10월 25일(토)]

○ 대상공관(13개 공관)

주네덜란드대사관겸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덴마크대사관,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주모로코대사관, 주튀니지
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주레바논대사관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 13.(월) 10:00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0. 14.(화) 10:00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0. 15.(수) ~ 10. 24.(금)	[아주반] ○ 주필리핀대사관 ○ 주일본대사관 ○ 주중국대사관 ○ 주상하이총영사관 ○ 주캄보디아대사관 ○ 주베트남대사관 ○ 주태국대사관 ○ 주라오스대사관	해당 재외공관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 합동감사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합동감사

일 시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 16.(목) ~ 10. 26.(일)	[미주반] o 주미국대사관 o 주유엔대표부 o 주뉴욕총영사관 o 주토론토총영사관	해당 재외공관	- 주유엔대표부에서 합동감사
	o 주페루대사관 o 주브라질대사관 o 주아르헨티나대사관 o 주칠레대사관		- 주페루대사관에서 합동감사
	o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o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주로스앤젤레스총영 사관에서 합동감사
	o 주벤쿠버총영사관 o 주시애틀총영사관		- 주벤쿠버총영사관에서 합동감사

일 시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 16.(목) ~ 10. 25.(토)	[구주반] ○ 주네덜란드대사관겸주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 ○ 주독일대사관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주 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주룩셈부르크대사관 ○ 주덴마크대사관	해당 재외공관	- 주네덜란드대사관대 표부겸주헤이그국제 기구대표부에서 합동 감사
	○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 기구대표부		- 주제네바유엔및국제 기구대표부에서 합동감사
	○ 주모로코대사관 ○ 주튀니지대사관		- 주모로코대사관에서 합동감사
	○ 주튀르키예대사관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주레바논대사관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에서 합동감사
10. 28.(목) 10:00	[종합감사]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6. 주요감사 실시내용

가. 외교부 소관

(가) 외교부

1) 본 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반외교	○ 2025년 8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외교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 루비오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제기된 친중 우려, 대통령 당선 이후 정상 간 통화까지 3일이 소요된 점, 조지아주 사태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관계 관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 미국 내 9개 총영사관 중 4곳이 공석인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지역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주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곳인 만큼 외교적 아웃리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 ○ 정부 외교 노선과 관련하여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 표면화됨에 따라 외교 분야에서 정책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 ○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하여, 막대한 비용 부담을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추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유사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무료 사용 상태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전 시에는 정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 ○ 일본 다카이치 총리 취임 시 한일관계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점을 제기하며, 정부가 관련 정치·외교 동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긴밀한 소통·협력 필요성 제기 ○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3차례 만난 정상회담에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 7광구 현안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2008년 이후 중·일 간 경제적 이권을 나누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 ○ 3년 유예기간이 있으나 언제든 JDZ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 구조, 국제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의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중 시위와 혐중 정서가 외교 전략적 측면뿐 아니라 관광·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와 재외국민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정치적 이익을 위한 혐중 정치는 국내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고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정부의 인식과 대응 방향에 대해 질의 ○ 중국 측의 서해 구조물 설치로 수년간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중국 외교부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실제로 논의되었는지와 중국 측의 구체적 입장에 대해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언론에 제기된 ‘선란 3호’ 추가 구조물 설치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국 측이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 명확한 확인 요청과 함께 외교부의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 ○ 미국의 대러 독자제재로 인해 러시아제 산불 진화 헬기의 부품 수급이 곤란하고, 대체 수단인 미국산 헬기 임차 또한 반출 제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 예외 인정이나 대체 수단 확보를 위한 외교적 지원 필요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가 수출·금융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한 결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 ○ 일본은 G7 회원국 자격으로 대러 제재에 참여한 반면, 한국은 공식 회원 자격 없이 동참한 점의 타당성에 대해 지적하며, 대러 수출통제 해제 및 금융제재 복원 시점에 대해 질의 ○ 신정부 국정과제 중 주변 4국 외교 전략에서 대러 제재 동참 노력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침략전쟁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 한러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직항 재개 검토 여부 및 러측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이례적인 공동 일정이 우리 안보 및 대중 관계에 갖는 함의에 대한 정부 인식 질의 ○ 중국 국경절 기간(10월 1~8일) 우리나라 단체 무비자 입국 중국인 증가(약 30% 증가) 및 명동·성수 상권 매출 증가 사례 언급, 근거 없는 혐중 정서 부추기기가 중소기업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주는바, 무분별한 혐증 조작 행위 지양 필요 ○ 한중 정상회담에서 2단계 FTA 논의 필요성 강조 ○ K-디플로머시 추진에 있어 미래 지향적 접근뿐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외교’의 중요성 강조. 한국이 겪었던 역사와 고통을 기반으로, 인도적 위기나 인권침해를 겪는 그룹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K-디플로머시의 핵심이라 언급 ○ 최근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철거 사례를 들어, 민간과 학계가 조성한 평화의 기념 조형물이 일본의 로비로 인해 사라진 점을 비판하고, 우키시마호 희생자, 조세이 탄광 희생자, 야스쿠니 신사 관련 일본 과거사 문제 등도 기억외교 차원에서 외교 전략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 ○ 전통적 공식 외교뿐 아니라 공공외교와 트랙 투 디플로머시 (Track-II Diplomacy)를 활용해 역사적 기억을 미래 동력으로 전환하고, K-디플로머시 콘셉트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 ○ 중국 국빈 방문 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진행 부적절 지적
경제외교	○ 자유무역질서 수호를 위한 대안으로 소다자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GDP의 약 15%(EU 결합 시 30% 이상)를 차지하고 미·중이 제외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의 전략적 가치 강조 ○ CPTPP 가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소다자 협력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를 주도·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CPTPP 가입 전략과 중장기 구상에 대해 질의 ○ 미·중 관세 협상 성사 시 중국의 북·러 분리,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미 대화에서의 중재자 역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대해 질의 ○ 기술·AI·희토류·인도주의 등 신안보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글로벌 전환기 상황에서, 외교부의 현 조직 구조와 전통적 전문성이 이러한 신안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 외교부 내 AI 관련 예산·인력 확충 계획과 국제기구와의 연계 전략, 그리고 기후·AI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글로벌 어젠다 형성 및 중장기 확대 계획의 마련 필요
한미 협상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과 연계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가 우리 경제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 ○ 통화스와프 없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향후 APEC 계기 추가 한미 협상 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질적 협상 추진 필요 ○ 현대차의 대미 협상 지원과 관련한 외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과 정부 설명 및 실제 협상 내용 간 괴리 가능성 지적 ○ 7월 한미 정상회담 및 관세 협상 당시 합의문 없이 성과를 과도하게 홍보한 정부의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협의 중인 사안은 협의 중임을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국민에게 혼선을 초래한 소통 부재 지적 ○ 정부가 설명과 달리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의 개념과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대통령 UN 방문 기간 중 총리 발언으로 발생한 대미 투자 관련 메시지 혼선의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정부 대응 전략의 불투명성 지적 ○ 미측이 제시했다는 새로운 대안과 수정안의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협상 진행 상황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적 ○ APEC 정상회담 전까지 한미 간 협상 타결 가능성과 점점 형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제시 필요 ○ 미·일 무역합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이 한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과 3,500억 달러 중 일부를 제외한 투자 구조와 성격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성급한 합의 추진의 위험성 지적 ○ 미·일 합의와 유사한 조건이라면 국익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제기 ○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왜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지적 ○ 한미 무역협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점과 주요 공관장 공식으로 인해 대미 협상과 로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 요구는 미측의 과도한 요구로 국익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므로, APEC 시한을 이유로 조급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협상 필요성 제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조속한 협상 타결 필요성 강조 ○ 미·일 합의와 유사한 조건 요구 또는 미·일 간 이면 합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반스-톨레프슨법으로 인해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 ○ 정부가 MASGA를 외교 성과로 홍보하고 있으나, 미 국방부 수출법에 군함 해외건조 금지 조항이 포함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미 의회를 상대로 어떠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질의 ○ 중대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G7, NATO, UN 총회 계기 정상회담이 연이어 무산된 점은 외교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반스-톨레프슨법 개정을 통해 미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미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필요성 제기 ○ 미국 군함을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법 개정 필요성과 공화당 발의 ‘인슈어링 네이벌 레디니스 액트’ 통과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외교부 및 주미 대사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로비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지적 ○ 마스가 프로젝트 등 한미 조선 협력 논의 관련, 국내 기업의 미국 군함 제조 참여 및 향후 우리나라의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 확대를 위한 법적 제약 해소 등 전략적 외교 노력 강화 필요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한미 관세협상이 국가 경제·외환시장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APEC 시한에 쫓긴 졸속 타결을 경계하고,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이행 방식과 외환시장 감내 가능 범위(연 150~200억 달러)를 고려해 상호 이익·상업적 합리성·시장 충격 최소화라는 협상 원칙을 끝까지 견지할 필요 ○ 한미 안보 협상은 일정 부분 진전된 반면 관세 협상은 계속 진행 중으로 양 협상이 분리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나, 안보 협상 선행 타결 시 협상 지렛대 상실로 관세 협상에서 추가 양보 우려가 있는바 안보·관세 협상의 일괄 타결이 국익에 바람직 의견 제시 ○ 한미 관세협정 타결 시 재정·환율 부담, 결렬 시 시장 불안·외교 리스크가 병존하고 장기 지연 시 수출에 중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명확한 데드라인 설정을 통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 제기 ○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별 관세 시도 관련, 정확하게 알고 선도적으로 준비 및 대응 필요
한미 비자 워킹그룹	○ 최근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의 내용이 B-1 비자·ESTA 하에서 허용되는 작업 범위를 새롭게 확대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규정을 단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지에 대해 질의 ○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B-1 비자·ESTA 사용 범위를 재확인 하였으나, 이는 기존 비자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 ○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사례를 감안할 때, 미국 측의 과도한 단속과 자의적 해석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제1차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 결과가 미 국무부 비자 매뉴얼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ICE·CBP의 자의적 해석으로 발생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회색지대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현장 공유 필요 ○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 예정인 한국 투자 데스크가 단순 상담 창구가 아닌 실질적 문제 해결 창구가 되도록 외교부의 지속적 점검과 요구 필요 ○ 복잡한 업무 수행 인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B-1 비자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미 의회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 미 의회 차원의 새로운 비자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B-1·ESTA 비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신속한 대안이라는 의견 제시
개발협력 (ODA)	○ 캄보디아 ODA 예산의 급증 배경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 ○ 캄보디아 ODA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안전 문제가 방치되었다는 비판 ○ ODA는 원칙적으로 수원국 수요에 기반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캄보디아가 제안한 사업을 배제하고 대형 고부가 인프라 사업을 재요구한 EDCF 추진 과정의 적절성 문제 지적 ○ 캄보디아 ODA 관련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납치·감금 사건이 폭증하던 시기에 공관과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한 감사 필요성 제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최근 3년간 ODA 발주 사업의 수의계약 비중 과다, 심사위원·수주업체 간 이해관계 교차 구조를 지적하며, ODA 인력풀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도덕적 해이 방지와 코이카의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최근 ODA 현장 방문 사례를 통해 양자 ODA 사업장에서 국가 브랜드와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 지적, 현장 표식 부족 및 ‘K’ 표기만으로 국가 인식 어려움 사례 제시 ○ 기관별 실적과 경쟁 중심의 관리로 ODA 전반에 대한 통합적 그림 부재 문제 제기, 일본 사례처럼 국가 표식과 문구를 의무화 해 양자 ODA의 국가 정체성 강화 필요성 강조 ○ 특검 수사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절차가 거의 중단됐는데, 특검 관련한 ODA가 아닌 경우 중단 해제 검토 요청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건 강국으로서 위상 강화 및 글로벌 미래산업형 ODA 경쟁 심화를 고려, 기존 인프라·중복 중심 ODA 에서 혁신기술·역량 중심 ODA로의 전환 필요 ○ 의료 AI, 디지털 헬스, 감염병 대응, 바이오·R&D 등 실질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 ODA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 국제기구 환경 변화 속에서 국제보건기구(GAVI·글로벌펀드·CEPI 등) 내 한국 위상 대비 영향력 미흡 지적, 재정 기여와 연계한 한국인 인재 진출 확대,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확대, AI·우주 등 신흥 분야 국제규범·거버넌스 선점 필요성 언급 ○ 재외공관장의 기관장 감독권과 관련, KOICA는 포괄위임 방식인 반면 KOTRA는 ‘기관 자율성 존중’ 문구를 반복 반영하는 등 형식·내용상 불균형 존재 지적, 공관의 총괄·조정 기능은 인정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되 ODA 등 전문기관의 고유 업무와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타 기관 법례를 참고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북핵해결 및 통일외교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평화적·산업적 목적에 한해 확대하려는 정부의 협상 방향과 미국 측과의 협상 경과에 대해 질의 ○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플루토늄 농축 등 핵 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제시 ○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미측과의 전략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강조 ○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현재의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 국익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고 평가 ○ 국회 차원의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남북을 아우르는 중장기 평화 구도 형성을 촉진할 것을 요청 ○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 수소폭탄 소형화, ICBM 다탄두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 평가에 대해 질의 ○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에 대해 질의 ○ 정부가 제시한 중단-감축-폐기 3단계 비핵화론 및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한미 간 보다 명확한 공동 메시지 필요성 제기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소트 오브 뉴클리어 파워’로 언급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한 발언의 의미를 짚으며, 이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질의 ○ 해당 발언과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언급이 APEC을 전후한 북·미 접촉을 유인하는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는지, 북·미 회동 성사 가능성에 대한 정부 평가 질의 ○ 북·미 회동이 성사될 경우 판문점·북측 지역·제3의 장소 등 후보지를 전제로, 장소 선택과 관련한 정부의 전망 및 준비 방향에 대한 질의 ○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화 및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 북·미 대화 국면 전환 시 핵 동결·감축 중심의 협상으로 이동하고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체계가 약화·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담 관련 의제 및 사전 조율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APEC 과정에서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한 측 회동 참여 문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언급 ○ 북미회담 확정 시 판문점 또는 원산갈마지구 등 적정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가 회동을 뒷받침해야 한반도 평화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음 강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북한의 APEC 전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안보 위협 행위인데, 정부의 별도 성명 미발표 지적, 국제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반복 필요 강조 ○ 트럼프 1기 당시 남북대화 실무 경험이 있는 케빈 김 주한미대사대리 부임, 10월 10일 엘리슨 후커 국무부차관과 외교부 1차관 면담 등 북·미 대화 준비 정황 여부 질의
APEC 정상회의 관련	○ APEC 정상회의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가 집약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 ○ APEC 정상회의 계기 주요국 정상 방한 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질의 ○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방한 여부, 이에 따른 한·미·중·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및 장소에 대해 질의 ○ 경주선언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준비 필요 ○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필요 ○ APEC 계기 미국과 중국 동시 국빈방문 진행 외교 관례상 부적절 지적 ○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러시아 부총리와 회담 등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개선 필요 ○ APEC 계기를 활용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해당 회담이 국제정세상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의전·행사 등 제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APEC 경주선언 준비와 관련하여, 무역 자유화·관세 철폐·지속 가능한 발전 등 기존 APEC 어젠다와 최근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적 국제정세 간의 충돌을 지적하며, 이번 경주선언에 담긴 핵심 내용과 이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APEC을 계기로 AI 거버넌스 등 미래 전환 어젠다를 한국이 주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APEC AI 이니셔티브에 한국의 AI 전략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 APEC 경주선언 채택 이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외교부 내 AI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상설화 필요 제안 ○ APEC은 WTO 자유무역체제의 공동체로 볼 수 있는바, 이번 공동선언에 자유무역이라는 기본적 이념 문구 삽입 가능 여부 질의
영사서비스 및 재외국민 보호	○ 국외도피사범과 동명이인인 우리 관광객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건과 관련 질의에 이어, 유사 사례가 인도네시아·스페인 등에서도 반복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부처 간 협업 부재로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민원서식 부재 및 여권안내 홈페이지 접근성 미흡에 대한 문제 제기 ○ 해외에서 우리 국민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직·인력 축소는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조적 보완 필요 ○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김해국제공항에는 긴급여권 발급 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긴급여권 발급 창구의 조속히 설치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재외공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예방·대응 대책 질의 및 재외공관 사칭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 메시지 필요 ○ 중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추정·몰수된 자산 중 일부를 환수받는 제도가 있는바, 우리나라도 범죄수익 환수·환급 시스템 구축할 필요성 제기 ○ 캄보디아 내 한국 사람들 중 불체자들이 과태료·항공권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 당국과 협력해 해당 문제 해결 필요 ○ 포르투갈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 관련 유족에 대한 현지 영사 조력은 잘 이루어졌으나, 국내 외교부 민원실 조력은 미흡 지적 ○ 해외 범죄·물의 발생자에 대한 출국 단계부터의 사전 차단 필요성 강조, 단체관광보다는 개별·편도·긴급 출국자에 대한 위험성 검토 및 출입국관리법·여권법 개정 검토 필요
캄보디아 취업사기 구금사태	○ 공관장 공식 상태가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고문·사망 사건 및 미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같은 재외국민 보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지적 ○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이 공항에서 되돌려 보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인도·말레이시아처럼 공관 직원의 송환 절차 참여, 현지 경찰과의 공조 등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및 연락두절된 우리 국민이 수백 명에 이르는 상황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며, 대통령실·NSC 차원의 보고 및 대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여행정보 하향 이후에도 범죄단지가 존재했고 감금 피해가 증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가해 온 점을 지적하며, 전용기 투입 등 특단의 대책과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촉구 ○ 캄보디아에서의 납치·감금 사건이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공관장 공석과 재외국민보호 인력 부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중심의 범정부적 대응, 주한캄보디아대사 초치,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실질적 협력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과 사전 경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의 ○ 주캄보디아대사관 내 전담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고, 외교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경찰·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 필요 ○ 캄보디아 사태가 전형적인 인신매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증원 요청이 기각되고 공관의 문제 인식조차 부족했다는 지적 ○ 지난 2~3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까지 포함해 철저한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구조적 개선 요구 ○ 책임있는 정부관계자가 즉시 현지로 가서 대규모 인력 투입, 현장 대책반 구성, 주재국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국민을 구해야 할 필요성 지적 ○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인지·보고·대통령실 보고 시점이 언제인지를 단계별로 질의 ○ 과거 재외국민보호위원회에서 초동 대응 강화 등을 논의했음에도,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외교부 내 재외국민 보호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어 대응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조직 복원 및 구조적 강화 필요성 제기 ○ 현지 공관 협조로 송환 대기 중인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의주시와 보호 조치 필요 ○ 여행제한 격상은 실제 현지 분위기와 괴리가 있고, 1만 2천여 교포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여행제한 수위 상향이나 ODA 중단 등 단선적 조치보다는 다원적 접근 필요 제기 ○ 범죄 규모가 캄보디아 GDP의 절반에 달하는 다국적·조직적 범죄로, 캄보디아 정부 압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인 만큼,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현장 대응 및 본부 보고 여부에 대한 점검과 책임 규명 필요 ○ 로맨스스캠 사건의 적색수배자 강 모 씨가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영사 측이 신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사 정보를 전달해 도주를 방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바, 대사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문제 지적 ○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고문에 의한 심각한 범죄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사고로 인식·설명하며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의 인식 오류와 판단 부실 지적 ○ 사건 보고 이후 약 두 달간 대통령·총리·외교부 장관 등 최고위급 차원의 외교적 조치와 지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실질적 요청이 전무했고, 공관장 공백 속에 실무자 중심 대응에 그친 총체적 부실 대응 문제 제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다수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 조치 필요 지적 ○ 캄보디아 내 범죄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제도적·현장 중심 대응과 함께 필리핀 사례와 같은 ‘코리아 데스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지적 ○ APEC 계기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아태 국가 연계 기반 국제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 대비, 다국적 조직범죄·인신매매·보이스피싱 등 역내 안전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한국 역할 소극성 지적 ○ 캄보디아 사태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APEC 차원 역내 안전 거버넌스 협의체 한국 주도로 구성할 의향 질의 ○ 캄보디아 사태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다국적·조직범죄로, 양자 외교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바, 팔레르모 프로토콜 등 기존 국제 협의체와 연계한 역내 다자 협력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 제기 ○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자들이 귀국 이후에도 텔레그램 박제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가족 협박에 노출되는 구조적 범죄 문제 및 브로커-범죄조직 간 연계로 인한 2차 피해 지속 문제 지적 ○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산업화·확산에 범부처 공조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보호 및 불법 모집 차단,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구조적 대응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와 코리안 전담반 설치의 차이점 검토 및 효율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사법권 없는 경찰관의 현지 근무에 대한 거부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자국 반정부 인사 송환 거부에 따른 코리안 데스크 설치 지연에 대한 외교부의 향후 대응 방안 질의 ○ 캄보디아 여행 금지 및 ODA 자금 동결 조치로 인한 교민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 제기 및 이에 대한 외교부의 향후 지원 계획 여부 질의 ○ 캄보디아 단속 강화에 따른 태국·라오스·미얀마 등 인접국으로의 범죄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메콩 5개국을 넘어 중국 공안을 포함한 APEC 역내 차원의 안전 협의체 구성 및 다자 공조 추진 필요 ○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사건 대부분은 온라인 사기 조직 참여자 관련, 감금된 국민은 대포통장 판매나 범죄조직 연루 사례로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캄보디아 동포 1만여 명, 8만여 캄보디아 다문화 사회, 대사관 실무 직원 등 다층적 발생 지적 ○ 정부 대응은 지난 3년간 경찰·영사 1명, 행정원 1명 증원에 불과해 실질적 조치 미흡, 캄보디아 동포에 대해 여행정보 조정, 위험지역 정보 제공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캄보디아 대사관 행정원 2명은 헌신적으로 근무했으며 후임 선발 시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하고 신상필별 적용 필요 ○ 캄보디아 국민 반한 감정 및 한인 사회 경제적 피해 심각, 가해자·피해자 구분한 정밀한 외교부 대응과 근본적 대책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대통령이 훈 총리를 만나 코리아 대책반을 설치한 것과 관련, 대책반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정보 공유 및 단속 지원, 현장 경찰관 의견 반영 등 역할 수행함을 평가 ○ 캄보디아 관련 국민 피해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지적, 대응 지연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확대되고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비판 ○ 캄보디아 공관장 3개월 이상 공석 상태 지적, 정식 대사 임명 필요 및 신속 배치 강조 ○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수배 중인 자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 박정욱 전 캄보디아 대사의 직무유기와 ODA 중심 활동, 영사 협의회 미 실시 및 본부 미보고 등 문제 지적,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감사 필요성 강조 ○ 취업사기로 규정하나, 실제로는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이 높은 바,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 연루 및 감금 주의보 발령 필요 ○ 정상적 취업 절차 없이 동남아 개도국 진출 시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 국민에게 사전 안내 필요 ○ 공관원 사비 사용 방지를 위해 긴급지원비 활용 필요성 강조. 현행 규정상 적극적 활용 불가 문제 지적, 규정 개정 필요성 언급. 연간 예산 편성 시 불용 및 부족 문제 발생하는바, 기금화 통해 안정적 운용 필요성 강조 ○ 취업사기·감금 등 복잡한 용어 정의 문제와 국제사회 기준 필요성 강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청년들이 캄보디아 도착 후 행동 통제, 감시, 불법 활동 가담 강요 등 착취적 조건에 노출되는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정의하는 전형적 인신매매와 일치하는바, 캄보디아 문제 해결 시 국제 인신매매 프로토콜에 따른 다국적 조직범죄 대응 전략 적용 필요
미 조지아주 한인 구금사태	○ 미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최초 인지 시점, 보고 경로, 보고 방식 및 보고 내용의 구체성에 대해 질의 ○ 조지아주 사태 및 캄보디아 사태 관련 정부의 위기 인식 및 컨트롤 타워 기능 부족에 대한 문제와 범정부 차원의 보고·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 ○ 구금자 인권침해 사안을 개인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기구에 제소 여부에 대해 질의 ○ 구금 피해자 개별 면담 인원 규모, 미 당국 상대 소송을 희망하는 구금자 수, 소송 진행 시 외교부의 조력 범위에 대해 질의 ○ 미 조지아주 사태 대응 관련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외교부의 적극성 부족 문제 지적
조직운영 및 제도개선	○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 중 대사 26명, 총영사 17명 등 총 43개 공관장 직위가 공석인 상황을 지적하며, 캄보디아·애틀랜타 등 주요 공관의 장기 공석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 공관장 인선 지연이 보은·특혜 인사 또는 사상검증을 위한 정치적 지연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주유엔대사 임명과 관련해 전문성 결여·코드 인사 논란을 지적하며 다자외교 전문 외교관으로 교체 필요성 제기 ○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주재관 확대 배치 필요성 제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외교부 본부의 핵심 실장급 직위가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인선 지연 사유와 후임자 임명 시점 질의 ○ 특임공관장의 전문성과 외교력 강화를 위해 자격심사가 형식이 아닌 실질 심사로 운영되어 탈락 사례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 ○ 실무직원 퇴직률 증가 원인을 질의하며 조직 관리 개선의 필요성 제기 ○ 전 뉴욕총영사, 전 호놀룰루총영사가 귀임 후 60일간 급여를 받고 퇴직한 사례를 들어, 특임공관장 귀임 후 당연퇴직 규정의 개선 필요 ○ 장관 집무실 및 재외공관의 도청탐지 장비 구비 여부, 점검 주기, 대응 매뉴얼 등 보안체계 전반을 질의하며, 재외공관이 여전히 도청 취약지대로 남아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 ○ 재외공관이 넓은 면적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현 보안 설계 자체가 문제라고 평가하며 종합 점검에 대해 질의 ○ 장관공관으로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삼청동 행사동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교부의 책임 있는 관리·대응 필요성 지적 ○ 시애틀 등 거점 공관의 과학기술주재관 부재와 예산 미충원 문제 지적 ○ 전체 재외공관 170여 개 중 43곳 공석, 구조조정·재조정 미흡과 실제 인력 배치 및 예산 조정 계획 부재 문제 강조 ○ 해외 국감 결과 재외공관 전반 상황이 대동소이함을 확인. 외교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행정요원 처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역할 보장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고물가 지역 파견 외교관들에 대한 활동비 현실화 미흡으로 실질적 활동 제약 발생, 외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활동비 현실화 및 예산 반영 필요 ○ 미국뿐 아니라 스웨덴과 같이 노벨과학상 등 글로벌 과학기술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에 과학관 파견이 필요하며, 파견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외교안보 현안 급증에 따른 외교부 인력 부족·중도 퇴직 증가 문제 지적 ○ 처우 개선·조직 혁신을 통한 젊고 유능한 외교 인재 육성 및 조직 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진단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제안 ○ 외교부 전체 성비는 5대5 수준이나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9대1, 대사급은 173명 중 여성 8명(4.6%)에 불과한바, 여성 대사 확대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외교 수단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성 지적 ○ 대통령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 시 통역 미숙 지적, 외교부 내 통역 시스템화 필요 및 향후 계획 요구 ○ 경제외교 역량강화를 위해 외교부 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국으로 확대 신설할 필요 ○ 한반도 평화외교 관련,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된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복원 필요 ○ 한·중남미재단 설립 검토 요청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 타	○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무리한 의전 요청 등과 관련하여 의전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 ○ 북한 도발이나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순방을 취소한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외교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 ○ 외교·안보 사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NSC 대변인 설치 등 범정부적 위기 대응 체계 정비의 필요성 제기 ○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SNS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특정인 사진이 게시된 것에 대한 지적 ○ 세종연구소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인사 개입 의혹, 특수자료 무단 파기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배경과 직권남용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 ○ 세종연구소 관련, 특정 인사 채용 과정의 문제, 국공유재산 성격의 토지 매각 의혹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제기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외공관에 발송된 전문에 기재된 표현이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함에도, 현장 판단을 오히려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국가안보실 기획, 외교부 실행으로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의 필요성 질의 ○ 중국 상무부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발표 이전에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사전 보고가 있었는지를 질의하고, 해당 조치가 우리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응·대책에 대해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국립외교원 채용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부정 채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경력으로 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본부 채용 합격 취소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 질의 ○ 특검의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이 SOFA 미준수 우려를 공식 서한으로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그간 “미국 측 항의가 없었다”고 설명한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 ○ 주한미군의 항의 서한에 대해 외교부가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미국 측에 어떤 입장과 논리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 님 관련 서명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정 서명이라는 점과 당시 외교부 직원 현장 개입 사실 확인, 위법성·부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 강제동원 피해자 제삼자 변제안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주도 여부, 줄속 추진 현황 및 민관협의회 운영의 문제점 지적 ○ 강제동원 공탁 과정에서 가짜 인감 사용 사실과 이를 외교부 사무관이 제안했다는 증언 제시, 외교부 내부 관여 의혹 제기, 개인 책임 전가에 그치지 말고 외교부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필요성 강조 ○ 외교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측 활동이 한중어업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달간 가시적 성과 없이 협의만 지속되고 있어 실효적 대응 부족 지적 ○ APEC 한중 정상회담 계기 잠정조치수역 사안을 정상 간 의제로 명확히 제기하고, 철거 불이행 시 비례적 조치 및 미측과의 공조 필요성 강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서해 구조물 관련, 정치공세 지양하면서 행정 당국 간 공식 문제 제기 필요성 언급, 국민 정서와 국제법·한중어업협정 근거를 바탕으로 정식 대응 필요 ○ 한미 관세협상 MOU 서명 가능성 질의,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를 포함한 문서화 필요, 산업 생태계·방산 수출·SMR 등 영향과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 해결 필요 강조 ○ 동명이인으로 혼동되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국민 사건 관련 정상적으로 조치했다는 외교부의 사후 보고와 달리, 피해자는 귀국 시 입국 지연, 지속적 수배 등록, 구청 방문 시 경고 문구 등으로 불편을 겪은바, 피해자 치유 및 회복 미흡, 책임 있는 대응 부재 문제 지적 ○ AI 발전과 확산이 가속화되는 사회의 흐름을 고려하여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데이터를 보강하고 확산하는 데 집중한 AI 대응형 데이터 외교정책 필요 ○ 총리외교의전팀의 정상적인 의전 지원 활동 필요 ○ 미국과 안보 관련 협의 진행 시,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10년 내 근접시키는 방식의 합의문 발표 여부 질의 ○ 권세중 대사, 2023년 3월 미국 워싱턴 총영사로서 공관장 대기 및 승진예정자였으나 이유 없이 자격 박탈 후 약 1년 5개월 동안 대기 임명 관련 감사 필요성 제기 ○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관련, 일본 시민사회 주도로 강제동원 희생자 추정 유골·유류품이 확인된 반면, 일본 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양국 시민사회 협력을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공식·제도적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제주도의 무비자 정책의 부작용 지적 및 중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해외순방 시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 설치 관련 사실 확인 필요 ○ 재외공관, 현지 한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광복절 행사 등 개최필요

2) 주필리핀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상황에 대한 질의 ○ 최근 필리핀 내 反정권 데모의 심각성에 대한 질의 ○ 필리핀 내 反美 정서 또는 反美 감정에 대한 질의 ○ 일본이 필리핀과 RAA(상호접근협정)을 체결하고, 미·일의 ‘하나의 전장’ 구상 등 對중국 연대 下에서 신냉전 구도화 움직임일 보이는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 ○ 동남아 지역에 대해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와 상호 교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 금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하는바, 주필리핀 대사가 동행·의전을 담당하는지 여부 질의
경 제	○ 우리나라의 對폴란드·인도네시아 방산 수출 사례에서와 같이 불리한 조건(장기 무이자 차관 공여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는바, 필리핀 방산 수출의 경우 조건 및 협상 방향에 대해 질의 ○ 방산 수출 활동이 반중(反中) 봉쇄 구로도 연결되지 않도록,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low key 기조 유지의 필요성 제기 ○ 필리핀 내 홍수통제 분야 부패스캔들 관련, 해당 분야 우리 ODA 사업들의 연루 가능성 질의 ○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로 병원 등 필수 인프라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바, 우리 ODA 지원의 필요성 여부 질의, 필요 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요청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ODA 수원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서, 필리핀 정부 관리의 뇌물 수수 문제에 대한 질의 ○ 코이카 활동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 ○ 필리핀이 쌀 최대 수입국인 점을 감안, 관개시설 개선 등 농업 분야에 대한 ODA 지원 필요성 여부 질의 및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 필요성 제기 ○ 코이카가 2016~2020년간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치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 인바, 해당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 ○ 작년 실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 평가는 어떠한지 질의 ○ 필리핀 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내의 평가는 높지 않은 상황인바,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동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 사업 중단 시 필리핀 측의 반응 및 외교적 영향에 대해 질의 ○ 가사관리사 본사업 추진이 어렵더라도, 간병·노인 돌봄 등 여타 분야에서의 인력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성 제기,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요청 ○ 양구군에서 계절근로자 집단 진정 사건이 발생한바, 추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자 대상 교육(임금수령 등) 철저 필요
영사·기타	○ 금년 필리핀으로의 외환 밀반출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 질의 ○ 선제적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방안 모색 필요 ○ 필리핀 내 한인 대상 강력범죄 증가 추세이며, 특히 한인 사업가 등을 겨냥한 범죄가 주요 문제로 대두, 관련하여 현지 공관 또는 재외국민보호 활동상 애로사항 존재 여부 점검 필요 ○ 코리안데스크와 코리안헬프데스크의 설치 주체 및 인력 구성, 운영 방식 차이에 대한 질의 ○ 코리안데스크 3명의 권한 범위 및 실제 수사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의 ○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필리핀이 치안 대응 측면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현지 평가 질의 ○ 도서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별 사건·사고 대응에 어려움 존재, 지역별 출장 시 한인사회의 코리안데스크 증원 필요 ○ 코리안데스크가 재외국민보호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질의 ○ 필리핀은 개인 단위 범죄(생계형 범죄 등)가 주를 이루는 반면, 캄보디아는 조직적인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국가별 사건·사고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므로 맞춤형 정책 수립 필요 ○ 금일 오후 예정된 치안 관계자 면담 및 현장 방문에 앞서 현지 치안 실태 전반에 대해 질의 ○ 지익주 사건 주범이 현재까지 도주 중인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바, 배상 문제 문의 등을 포함하여 대사관을 중심으로 필리핀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추진 요청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코리안헬프데스크 담당자의 국적은 필리핀 국적인지 여부 및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 코리안헬프데스크 내 주요 직급·계급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질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계급의 인력이 파견되고 있는지 여부 ○ 현지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 채용 인력 운영 여부 및 역할에 대한 질의 ○ 긴급 민원 발생 시 대사에게도 직접 연락·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상반기 발생한 6건의 납치·감금 사건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여부 및 미해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신원 미파악 상태의 우리 국민 발생 시, 지원 및 신원 확인을 위한 대응·보완 방안이 있는지 여부 ○ 사건 발생 시 코리안데스크가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코리안데스크가 부재한 경우, 대사고나의 주재국 경찰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우리 국민 대상 강력사건 157건, 연평균 약 760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질의 ○ 필요 시 ODA를 활용한 치안 분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타국의 대통령 치안자문관 제도 등 치안 관련 우수 사례가 있음을 주재국 정부에 안내하는 방법 검토 요청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영사의 주재국 측 카운터파트너가 누구인지 질의 ○ 긴급전화 대응에 있어 공관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응 당부 ○ 재난 상황 발생 시 공관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 ○ 재난 상황 발생 시 1차 집결지를 이탈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 탈출 계획이 포함된 도상훈련 실시 필요성 제기 ○ 한국 본청과의 공조 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 ○ 인터폴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 ○ 코리안데스크 외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 ○ 필리핀 내 치안 문제 관련, 경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ODA를 통해 우리의 노하우 전수 및 우호관계 구축,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협조 필요 ○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코피노(Kopino) 관련 현황이 있는지 질의 ○ 비록 공식 통계는 없더라도 코피노 문제는 실재하는 사안인 만큼, 코피노가 친부모를 찾고자 할 경우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책임있는 대응임을 강조 ○ 코피노 문제와 관련한 기본 원칙 수립, 코피노 후원 민간단체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 검토 필요 ○ 여권 위조, 비자 브로커 연계 등 불법 행위 연루 사례가 있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 질의 및 허위서류 제출, 불법 브로커 행위 등 있을시 엄정 관리 필요성 제기 ○ 비자 영사 인력 증원과 관련, 사증 영사 2명이 비자 심사만 담당하기에도 과중한 상황에서 비자신청센터 및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 ○ 공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질의

3) 주일본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미·일 협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 제기 ○ 한미일 협력 관련 용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 한미일 협력/ 한미일 안보·군사 협력/ 한미일 동맹은 구분되어야 하고, 이슈별·한정적 협력이 바람직함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달리, 최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 필요성 제기 ○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사를 직시하되 국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 중요함 강조 ○ 향후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주일대사로서의 인식과 목표에 대한 질의 ○ 관료 출신 주일대사 임용이 향후 한일관계 기조 전환에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 ○ 일본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과거사 문제(사도광산, 강제징용, 우키시마호 등)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을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제기할 필요성 강조 ○ 아키히토 상왕 방한을 한일 간 상징적 교류·화해 계기로 추진해볼 수 있는지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조총련과 민간단체 간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의
경 제	○ 미·일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확보한 반면,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 중 직접투자 비중, 대출·보증 형태 여부 등 협상 내용에 대한 주일대사관의 파악 현황 질의 ○ 일본 자동차 관세(15%) 대비 우리나라 관세(25%) 유지로 인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지적 ○ 일본 협상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 여부 및 우리 협상 전략에 대한 질의 ○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 방식이 국가별로 동일한지 여부 질의 ○ 라인 야후 사태 관련, 일본 행정지도의 문제점 및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 미흡 지적 ○ WTO 다자무역체제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일본·EU 등과의 통상 분야 공조 필요성 강조 ○ 일본의 적극재정·금융완화 기조 가능성 및 美 트럼프 정권의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 등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촉발 가능성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
영사·기타	○ 일본 내 혐한 활동이 오프라인 시위에서 온라인·SNS 중심으로 혐한 콘텐츠 등이 확산 중인바, 대사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성 강조 ○ 워킹홀리데이 참가 청년 보호를 위해 상담·소통 창구 운영 현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황 및 지원 질의 ○ 일본 방문 한국인 급증에 따라 입국 편의 제고 및 여행객 안전 확보를 위한 대사관 차원의 대응 방안 질의 ○ 일본의 도서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구조헬기를 임차하여 구출하는 방안 유무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질의 ○ 나가사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추모비 관리 실태가 열악한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 사도광산, 조세이탄광, 우키시마호 등과 관련, 유해 발굴 및 추도 사업을 한일 협력 과제로 설정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 강조 ○ 사도광산 미지급 임금(한반도 출신 노동자 1,140명) 관련 명부 확보 및 일본 측에 공식 요청 진행 여부 질의 ○ 지난 국정감사 당시,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 명부 확보 요청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진행상황 질의 ○ 북한 신문의 해외판권 대행사 두 곳 중 한 곳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음. 한국 언론사 또한 동 대행사에 대금을 송금 중인데, 동 자금이 일본의 대일 제재로 인해 동결되어 공탁중이라는 추측이 있는바, 이를 포함한 유사한 성격의 동결 자금 실태에 대해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 전임 대사 재임 시 前 정부의 과도한 순방으로 대사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있었다는 제보 관련, 사실 여부 질의 ○ 최근 제출 자료 중 일부가 이미 한글화되어 있음에도 원문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바, 공관 일반현황 등 자료 전반에 대한 한글화 정비 필요성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방북 일본인 현황에 대한 질의

4) 주중국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대만 관련 -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 담긴 대만 관련 내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 대만의 미래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원칙 있고 용기 있는 발언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문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한바, 양안 관계의 평화 유지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사안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임해줄 것 요청 -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 GDP 23.3% 감소 전망 보도 관련, 양안 관계의 평화적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이 수행할 수 있는 외교적 역할 필요성 제기 ○ 북한/한반도 관련 -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중국 측의 공식·비공식 입장 파악 여부, 본부의 지침 또는 회신 여부 질의 -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지속할 경우, 탈북민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 질의 -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중국과의 지속적 소통과 설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것과 관련, 대사관이 한반도 문제 관련 중측과 적극적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 - 과거와 달리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사전에 공유한 배경 및 외교적 의도, 김주애 동선 파악 여부, 우리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김정은 방중 또는 리창 총리 방북 계기, 중국의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 질의 - 금년 2월경 북한 국가보위성과 중국 국가안전부 간 탈북민 관련 업무협약 체결 여부 질의 -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 진입 여부에 대한 질의, 미중 경쟁은 존재하나, 아직 고착화되지 않았다는 견해 제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 지적, 중국이 북중러 삼자회담을 회피하고 있는 배경을 활용할 필요성 제기 ○ 서해 중국 구조물 설치 관련 - 우리 측도 구조물 설치 등 맞대응 필요성 제기 - 중국 측 접촉 시 국내 우려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제기 ○ 중국의 외교 특성상 고위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 매우 중요, 미국·일본 대비 중국에서 대사의 역할 더욱 중요 강조 ○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관련, 대사의 배석 및 참석 여부 질의 ○ 혐중 시위로 인한 사회적·외교적 비용이 크다는 점 지적, 혐중과 반중의 구분 필요성 제기, , 혐중 시위 중단 결의안 추진 사실을 중측에 전달해줄 것 요청 ○ 대사의 임명 관련, 외교 경험 부족 및 정치적 배경 논란에 대한 질의, 대통령의 특별 당부 여부, 출국 전 외교부·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임무 관련 메시지 여부 질의 ○ 중국 4중전회 및 군부 고위 인사 대거 숙청 관련, 시진핑 주석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도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2027년 이후 4기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의 ○ 중국 내 반간첩법 적용으로 우리 국민이 최초 체포된 사안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필요 ○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 인도적 대우와 인권 보호가 반드시 필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관련하여 강제북송 재발 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명확한 약속을 이끌어내도록 주문
경 제	○ 중국 관광객 100만 명 증가 시, GDP 0.08% 상승 효과가 있음에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반중 시위가 내수와 국익에 부정적 영향 초래함 지적 ○ 우리 수출 원자재 중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70% 이상 품목 약 500개, 50% 이상 품목 약 1,000개)인데, 혐중 시위 격화 시 한중 통상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실용외교 차원에서 혐중 정서 관리 필요성 강조 ○ 혐중 시위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반미 시위 역시 문제라는 인식 필요 ○ 우리나라 對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은 희토류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임.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중일관계가 한중관계보다 협력이 더 활발한 이유에 대한 분석 요청 ○ 미국의 소프트웨어 수출통제가 중국 기술 발전을 억제할지, 오히려 촉진할지에 대한 평가 ○ 미중 통상 협상 전반에 대한 경제공사의 견해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2024년 690만 명)과 비자 완화 사례를 언급하며, 한중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 제기 ○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사증 정책 관련, 일부 정치권의 '중국인 범죄 증가 우려' 주장에 대한 대사·총영사의 견해 질의, 불법체류 문제 제기는 가능하나,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익에 부정적 지적, 불법체류가 증가할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세밀한 재검토 필요 ○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정책은 관광수입 증대 및 국가경제 이익에 부흥하는 긍정적 영향 적극적 검토 필요
영사·기타	○ 캄보디아와 유사한 우리 국민 피해 사건(총격·피살·납치 등)이 중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상시 대비 필요 ○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270명 관련, 범죄 유형별 분류 가능 여부 질의 ○ 중국 내 경찰주재관 인원 현황 질의, 경찰주재관의 수사 경험 활용한 현지 경찰당국과의 공조 강화 및 대사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 제기 ○ 보이스피싱 피해의 약 94%가 중국발이라는 점 지적, 중국 연안 지역(옌타이·웨이하이 등)과 연계하여 상하이를 포함한 동부 연안 지역에서의 경찰 협력 강화, 경찰협력관 추가 파견 필요성 제기 ○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초국경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 중인바, 상하이 등 주요 거점 도시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가능성 검토 필요성 제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중국 하이난성 K-POP 공연 취소 사유 질의, 중국 정부의 불허 여부, 10년간 공연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에 대한 외교적 평가 질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사의 역할 주문 ○ 만리장성 연장 문제 등 중국의 역사·영토 인식과 관련한 문제 제기

5) 주상하이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영사·기타	○ 주상하이총영사관의 사증 담당 영사 증원 필요에 대해 객관적·정량적 근거를 갖춘 증원 사유 제시 필요, 연간 약 40만 건에 달하는 사증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 가능 여부, 비자신청센터 운영 실태 및 타공관과의 비교 질의, 단체관광객 사증 면제 제도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지난 4월, 주상하이총영사관의 관할 지역 방문 한국인 관광객 연락두절 사례 관련 주의 공지 게시 건 관련, 일부 언론에서 중국 내 관광객 대상 납치 사례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 발생, 향후 공지 작성 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고려 필요 지적 ○ 2020년~2025년 9월까지 주상하이총영사관을 포함한 중국 주재 공관과 외교부 간 수발신 공문 통계 관련, 중국 전체 기준으로 약 32% 감소한바, 이에 대한 한중관계 등원인에 대한 질의

6) 주캄보디아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캄보디아 국가 특성상 본 사안(캄보디아 한국인 구금 피해)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 최고위급 외교 채널 가동이 필요 ○ 대사직이 7월 이후 공석 상태인데, 신임 대사 신속 부임을 본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질의 ○ 대사 이임 이후 우리 정부 고위급에서 캄보디아 측과 직접 협의·통화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 ○ 대사 공석 상태에서 대사대리의 외교적 접촉·조율 권한과 범위에 대한 질의 ○ 전임 대사 재임 시 본 사안에 대해 본부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질의 ○ 10. 13. 외교부(본부) 국정감사 시, 본부는 대사관의 보고에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바, 이에 대한 입장 질의
경 제	○ 크메르루주(1967년 결성된 캄보디아의 급진좌파 무장단체) 이후 정부 기능 약화, 외환 반출 통제 부재 등으로 캄보디아가 국제범죄조직의 은신처가 되고 있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질의 ○ 중국인 범죄조직이 주도하고 프린스 그룹이 그 정점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 견해 질의 ○ 현지 범죄조직과 캄보디아 경찰·권력층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국내 범죄조직과의 연결 가능성 여부 ○ 통일교·김건희 ODA 커넥션 수사로 인해 對캄보디아 ODA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ODA 중단 관련 캄보디아 당국의 공식 또는 비공식 항의 여부 질의 ○ 캄보디아 경찰당국과의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ODA 지원을 지속·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제시 ○ 치안·경찰 협력 강화를 위해 ODA 활용한 조직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영사·기타	○ 캄보디아 구금·피해 현황 관련 -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검거·구금된 인원들의 국적별 현황 파악 및 자료 제출 요구 - 캄보디아 당국에 의한 300여 명 구금설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현황 파악 질의 - 현재 우리 국민이 실제로 몇 명이 감금·구금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약 550~570건 신고 접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의(신고 주체, 납치·감금·연락두절 등 유형, 해결 방식 및 결과 등) - 송환된 64명이 330명 집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대사관 대응 및 문전박대 의혹 관련 - 의원실이 나서서 구출한 사건 관련, 대사관의 안이한 대응 및 문전박대 주장에 대한 입장 질의 - 스캠 단지 탈출 후 대사관을 찾은 우리 청년이 업무시간 外를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여권·현금 없이 대사관을 찾는 피해자들에 대한 현행 보호·지원 체계의 한계 - 방송(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일부만 구조하고 나머지는 방치했다는 주장 사실 여부 - 유력 정치인·권력 개입 여부에 따라 구출 여부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 로맨스 스캠·범죄 연루자 관련 - 여권 연장 위해 대사관 방문한 로맨스 스캠 적색수배자를 송환하지 않고 귀가시킨 사례 질의 - 로맨스 스캠 적색수배자 2명이 왜 아직 송환되지 않았는지 질의 - 로맨스 스캠 관련 면담을 누가 진행했는지 질의 - 울산경찰서와의 통화 내용 공개와 관련한 경위 설명 요구 - 범죄인 줄 모르고 유입된 선의의 피해자 사례 존재 여부 질의 ○ 여행객·교민 피해 관련 - 단순 여행객이나 교민 중 납치·감금·체포된 사례 존재 여부 - 330명 중 여행객·교민 포함 여부 - 범죄 단속 과정에서 선량한 교민 피해 발생 여부 ○ 대학생 박모 씨 사망 사건 관련 - 최초 보고 시점, 2·3차 보고 시점, 8월 9일 캄보디아 당국 통보 내용 및 본 사안 보고 전문 제출 요구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사망 보고 전문에 구타 흔적, 사인 추정, 납치 가능성 언급 여부 질의 - 부검·유골 송환에 2개월 반이 소요된 이유 질의 - 대통령실·외교부·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 지시 또는 고위급 통화 여부 질의 - 박모 씨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청 지시 여부 및 관련 공문 제출 요구 ○ 보고·조직·제도 등 관련 - 본 사안에 대해 대사관이 본부의 어느 수준까지 보고했는지 - 대사관의 상황 보고 부족으로 통계·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 제기 - 행정직원 2명 사의 표명 관련, 업무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시점 질의 - 여행금지 조치로 인한 교민 피해와 실제 위험 수준 간 괴리 여부 질의 - 상황 변화 시,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 및 본부 보고 요청 - 2024년 접수 건수가 220여 건에 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수준임에도, 행정안전부는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인력증원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 제기 - 사건의 성격과 위험도를 반영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인력·조직·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7) 주베트남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베트남 또 럽 당서기장이 한국 국민 방한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질의 ○ 베트남이 남·북한 모두와 교류하는 외교 노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 ○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금·폭행 등 범죄의 주변국 확산 가능성에 대한 공관 차원의 인식 및 대응 여부 질의 ○ 공관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
영사·기타	○ 최근(8.19.(화)) 호치민 인근에서의 한국인 3명 감금 피해 발생 사건에 대한 질의 ○ 유사 사건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찰 및 경계 유지 당부

8) 주태국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영사·기타	○ 출입국 관리 및 재외국민 안전 관련 제안 질의 및 청취 -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특단의 상황인 만큼, 동남아 4개국 (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방문 시, 국내 출국 공항 단계에서 출국 심사를 강화하여 온라인 스캠 등 범죄 관련 출국 가능성 사전 차단 기능 강화 ○ 공관 운영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 및 청취 - 금년 중 주태국대사관 접수 사건 총 108건(납치·감금 12건, 연락 두절 93건, 실종 3건) 모두 해결되었으나, 사건 유형에 대한 분류는 해결 이후 사후적으로 가능하다는 한계 존재 - 출입국 통계 관련, 주재국 이민청 및 관광청 통계를 활용 중이나, 관광청 통계는 외국인 입국 통계만 집계, 출국 통계는 미집계 - 우리정부의 법무부 통계는 입출국 신고서 기준 집계로 인해, 제3국 경유 귀국 시 출국 국가 통계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존재 - 우리 국민 매년 200만 명 이상 태국 방문, 총영사관·분관 없이 대사관 단독으로 재외국민 보호 및 사건·사고 대응 수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관리 한계 호소, 주23회 직항편이 운항 중인 치앙마이에 분소 개설 필요성 피력 - 태국의 중국인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파타야 지역 스캠센터 등 범죄 문제 발생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의 활동 확대 양상 주목 및 향후 우리 국민 대상 범죄 및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9) 주라오스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영사·기타	○ 라오스 내 재외국민보호활동 관련 애로사항 질의

10) 주미국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APEC 정상회의 주간 계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부 질의 ○ 주미대사의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수행 여부 질의 ○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 및 대화 시 북한의 대화 목적 질의 ○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인태지역 내 주한미군의 유연한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 미 의회 등에 우려 전달 필요 ○ 그동안 미국은 원자력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최근 농축 및 재처리 관련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배경과 구체적 합의 내용 관련 질의 ○ 한미 조선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존스법, 번스-톨랩슨 수정법의 개정필요 ○ 존스법 개정 등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타 법안 등 함께 고려 필요 ○ 최근 미국 내 발의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 등 미 의회 내 조선업 관련 법안 동향 수시 점검 및 주요 의원 접촉을 통한 성과 도출 필요 ○ 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망 질의 ○ 향후 미중관계 변화에 있어 우리나라가 가교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관련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경 제	○ 우리 조선 기업들의 대미 진출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관계 부처간 T/F 구성을 통한 대응 필요 ○ MASGA 프로젝트 관련 한정된 분야에서 영구적 예외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여 미국 내 반발을 최소화하며 협력 견인 필요 ○ 한미 조선 협력 관련 2025년 9월 실무협의를 내용 질의 ○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대상 제재 관련 협의 동향 질의 ○ 한미 관세 협상이 원자력 및 안보 관련 협의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 할 경우 안보 협의도 무산되는 것인지 질의 ○ 3,500억불 대미 투자 방식 및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우리 측이 제시한 대안 관련 논의 진전 여부 질의 ○ 대두 등 농수산물 추가 개방 관련 미측과의 논의 여부 질의 ○ 관세 협상 진전 동향 및 향후 계획 질의 ○ 대미 진출 우리 기업의 비자 관련 우려에 대한 대응책 관련 질의 ○ 호주 국적자에 배당된 E-3 비자 중 잔여비자를 한국 국적자에게 할당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한 파악 여부 질의 ○ 한미 워킹그룹에서 합의된 한국 투자 전담 창구의 역할 및 주 미공관과 미 법행 기관 사이 협력 체제 실제 구축 여부 관련 질의 ○ 1차 워킹 그룹 합의의 후속조치 소홀함 없이 이행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미 의회에서 PKWA(한국동반자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 및 필요한 여건 조성 관련 질의 ○ E-4 비자 신설 입법을 위한 자문회사 고용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 의원 수가 감소하는 등 동력 약화의 이유 관련 질의 ○ LG 엔솔-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 등 발생에 대해 공관 차원 대미 투자 현장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업과의 소통 당부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진출 지역에 대한 공관의 직접적인 아웃리치 관련 구체적 계획 유무 질의 ○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 관련 진전 동향 질의
영사·기타	○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처우 개선 노력 필요 ○ 조지아주 구금사태 당시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매뉴얼 내 명시된 ‘영사조력의 한계’ 관련 질의 ○ 미 이민국의 우리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및 SEVIS 종료 사태 당시 대사관이 제공한 영사조력 관련 질의 ○ 우리 국민 추방 통계 관련, 이민세관단속국(ICE) 발표자료와 외교부 통계에 차이가 있는바, ICE와 소통체계 강화 필요 ○ 해외 입양인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위해 공관 내 입양동포전담 창구 설치, 재외동포 전담영사 배치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각 거점 공관별 과학자 출신 파견 필요 및 과학 주재관 파견 계획 질의 ○ 경제안보전문관 외 경제안보 대응 인력 보강 필요성 관련 의견 질의 ○ 주재관 역량 실질적 강화를 위한 업무 성과평가 구체화 및 업무 역량 강화 방안 질의

11) 주유엔대표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공관장 임용 관련,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 및 기존 경험 활용을 통한 앞으로의 역할 당부 ○ 대북제재 및 북한인권 중심의 대유엔 외교 관련 평가 질의 ○ 안보리 결의 2375호 및 미국의 독자제재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재개 공식 선언 관련 향후 방향 질의 ○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 및 방향 관련 의견 질의 ○ ‘두 국가론’ 관련, 현행 헌법 및 국내법, 국제법을 고려했을 때의 의견 질의 ○ 남북기본합의서 내 이중성 관련,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인 데에 대한 의견 질의 ○ 유엔대사로서 북한에 대한 접근 관련, 주유엔북한대사와의 소통에서 오해될 소지가 없게 신중한 검토 당부 ○ 유엔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시아의 지역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여부 질의 ○ 독도 및 동해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전개하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

12) 주뉴욕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뉴욕시장 선거 관련 정세 질의 ○ 맘다니 후보 당선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삭감 발언 및 주방 위군 투입 문제 등에 대한 공관의 대비 방안 마련 여부 질의
영사·기타	○ 총영사관 구글 리뷰 관련, 교민들의 불편함을 체계적으로 챙길 것 당부 ○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관련 행정명령 관련 향후 예상되는 교민들의 불편 질의 ○ 재외국민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대한 현지 교민들의 반응 질의 ○ 동포단체 중심의 한인사회 대안으로서 유대인 사회와 같은 센터 중심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질의 ○ 한인 사회 커뮤니티 지속 및 발전을 위한 총영사관의 역할 당부 ○ 전임 공관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관련, 해당 사항이 공관의 사업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질의 ○ 뉴욕 내 우리 진출 기업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총영사관의 관심 당부 ○ 최근 셀트리온이 뉴저지에 있는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하여 추가 투자 예정인데, 시설 변경이나 증설 과정에서 조지아주 상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것 당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2023년 9월부터 뉴욕시가 단기 렌트 규제법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민들의 피해 질의 및 피해 상황 보고 필요 ○ 뉴욕 퀸즈 마운트올리벳 묘지에 무명 한인 독립운동가 100여명의 묘지가 방치되었다는 기사 이후 공식적으로 파악 및 조사를 실시했는지 등 여부 질의 ○ 문화원 내 행사나 프로그램에 별도의 평가·환류 체계 존부 질의 ○ 본부나 주뉴욕한국문화원 차원에서 여타 규모가 작은 공관들을 위해 기획 전문가 풀이나 매뉴얼, 컨설팅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질의 ○ 행정직원 업무 과중 관련, 민원 업무 및 순회영사 지원 현황 질의 ○ 공관의 인력 배치 효율화 및 업무 경감 조치 계획 질의 ○ 향후 임금 수준 및 복리후생 현실화를 위한 개선 계획 질의 ○ 지역 내 동포의 권익 신장 및 정치력 확대를 위한 공관의 노력 현황 질의 ○ 공관의 지역의회와의 소통 관련, 한인사회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원이나 공식 협의채널이 있는지 여부 질의

13) 주토론토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조항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현 상황에 대한 동포 사회의 반응 질의 ○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WFP) 정책 개편으로 인한 우려에 대한 총영사관 차원의 지원대책 및 계획 질의
영사·기타	○ 워킹홀리데이 비자 확대에 따른 우리 청년들의 캐나다 유입 증가 관련, 대마가 합법화된 캐나다 내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영사관 차원 제도성 홍보 강화 및 경찰당국과의 협조요청 검토 필요 ○ 각종 민원대응 및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외공관 외교직원 인력 충원에 대한 공관 의견 질의 ○ 총영사 부임 전 외교부 유네스코협력 T/F 팀장 재직 당시 사도광산 문제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실 혹은 장관실로부터 조속 진행 지시가 있었는지 질의 ○ 캐나다 사회보험번호 동명이인 착오로 인한 교민 불이익 사례 현황 및 지원 방안 질의

14) 주페루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한-페루 우정의 날의 페루 의회 통과 가능성 질의
경 제	○ K-문화와 ODA 사업을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의 접근 전략 준비 질의 ○ 한-페루 자원외교를 위한 대사관의 활동 질의 ○ 최근 페루정부의 리마 메트로 3·4호선 건설 재추진 관련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 관련 질의 ○ ODA 분절화에 따른 가시성 저해 관련 공관의 관리·조정 역할 당부 ○ 2024년 체결된 한-페루 핵심광물 MOU 이후 공관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 질의 ○ 소다자협의체 중요성 관련,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진전사항 질의 ○ 한국과의 교역에 대한 페루 측의 입장 및 압축전지 등 우리 기본 소재 수출 확대 가능성 질의

15) 주브라질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브라질은 중남미의 중심국가로서 우리나라 해외수출 다변화 정책의 중심이므로, 양국 사이 긴밀한 관계 발전에 책임감 필요 ○ 대사관의 브라질 상·하원의원 접촉 현황 질의 ○ 주브라질 북한대사관과의 교류 현황 질의
경 제	○ 보건의료 분야 관련 양국 협력에서의 걸림돌 및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 관련 패스트트랙 협의사항 질의 ○ 브라질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협력 관련, 국가 및 공관 차원의 제도적 협력 및 중장기 전략 방향 관련 질의 및 공관의 역할 필요 ○ 미국의 대브라질 50% 관세 부과에 따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질의 ○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브라질의 대응과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 확대 등 동향 질의 ○ 한-MERCOSUR 무역협정 관련 소고기 시장 개방 관련 문제 및 진전사항 현황 질의 ○ 최근 국산 딸기 수출 관련 브라질과의 수출 검역협상 타결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여타 품목 상황 질의
영사·기타	○ 브라질 내 한인사회 약화 관련 공관 차원의 지원 현황 질의 ○ 브라질인들의 한국 입국 관련 비자 발급 시 불만 사항 질의 ○ 한-브 워킹홀리데이 발효 이후 브라질 내 생활 환경 상 위험요인 관련 공관의 조치사항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브라질의 영토 규모 및 영사 업무 소요 고려 시 상파울루총영사관 외 신규 총영사관 추가 설치 필요 의견 관련 공관 견해 질의

16)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70년대 말 우리 정부에서 구입한 아르헨티나 농장 관련 현황 질의 ○ 한-아르헨티나 네트워킹 교류 여부 질의 ○ 아르헨티나 내 9월 지방선거 패배, 10월 중간선거 등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될 경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촉진제도(RIGI)에의 영향 여부 질의
경 제	○ 아르헨티나 내 리튬 관련 현황 질의 ○ 아르헨티나 소고기 수입 문제 관련, 소고기 수입 국가의 다변화를 위해 관련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 필요
영사·기타	○ 한국 유학생, 여행객 수 및 비자 발급 현황 질의 ○ 한-아르헨티나 문화교류 사업 추진 여부 질의 ○ 최근 공관 내 대사 차량 구입 시 국산차가 아닌 수입차 구매 이유 질의 ○ 아르헨티나 내 초인플레이션 관련 주거지원비 등 관련 공관 상황 질의

17) 주칠레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칠레와 우리나라 사이 UNOC(UN해양컨퍼런스) 유치 활동 동향 질의 ○ 우리 정부의 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활동 및 문화도시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칠레와의 협력 전망 질의 ○ 칠레 내 테노농장 관리 현황 질의 및 철저한 관리 당부 ○ 11월 칠레 대선 전망 질의 ○ 칠레의 연금 개혁 관련 합의 및 현지 청년 세대의 연론 질의
경 제	○ 칠레-중국 간 핵심광물분야 협력 관련 동향 질의 ○ 한국 기업의 칠레 진출 부진 사유 질의 ○ 칠레 내 삼성-포스코 양극재 공장 건 진행 불발 사유 질의 ○ 칠레의 국가리튬전략 이후 공기업(국가동공사(CODELCO), 광물공사(ENAMI))을 통해 리튬 개발협력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우리 기업들이 최종 미선정된 사유 및 이후 타 사업들의 진행 현황 질의 ○ 핵심광물의 정부간 협력 관련 논의 동향 및 공관 활동 질의 ○ 양국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이후 후속 사업 추진 동향 질의 ○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사업 추진 필요 ○ 핵심광물협력 관련 공관 차원 장기 전략 수립 필요
영사·기타	○ 공관의 중점 사업 및 지원 필요 건의사항 질의

18)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국내 상황에 따른 상반기 총영사관 대외활동 건수 감소 및 외교 네트워크구축비 집행 현황 저조 관련, 보다 적극적인 외교 수행 필요 ○ LA 내 주 방위군 투입 당시 현지 분위기 및 이러한 충돌 상황에 대한 공관의 대응 방안 질의
경 제	○ 조지아 주 사태 이후 공관 차원 우리 기업과의 접촉 사항 관련 질의 ○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관련 既개최한 기업 간담회 내용 및 향후 지원 계획 질의 ○ 중소벤처기업협의회 개최 현황 및 성과 질의
영사·기타	○ 한인 입양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현황 및 애로사항 질의 ○ 조지아 주 사태 이후 재외국민 불안감 증가 관련, 향후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 유승준씨 관련 비자 거부 문제 질의 ○ ICE 단속 관련, 미 당국과의 소통 여부 및 관련 간담회 개최 현황 질의 ○ 우리 교민 체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영사조력 관련 대체 조력 수단까지 고려하여 교민 불안 최소화 방안 모색 필요 ○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책 지속 점검 및 서류미비자 등 취약계층 안전 고민 필요 ○ ICE 단속 등 신변 안전 위협 상황에서 안전 공지에 공관 대표/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긴급 전화번호 등 함께 공지 필요 ○ 혐오범죄 대응 관련 현지 경찰 및 한인 커뮤니티와의 협의체 구성 여부 질의 ○ 재난 및 긴급상황 대비 교포 사회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질의 ○ 미 정부의 이민단속 위협에 노출된 동포 규모 파악 여부 질의 ○ 인종 차별 피해 한인을 위한 현지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 관련 질의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이민비자 등 발급 감소와 미국 내 反 이민 정서 연관성 질의 ○ 문화공연 업계의 비자 발급 어려운 관련, LA총영사관이 미국 내 한국 문화 확산의 교두보로서 관련 사항 점검 필요 ○ 총영사관 관할지역 등록 유권자 수 감소 관련, 공관 차원 점검 필요 ○ 순회영사 제도 관련 교민들의 불편 등 상황 질의 ○ 공관 재건축 시 지역사회 주민의 소통 공간과 같은 역할 고려 필요 ○ 인력 증원을 위해 공관 현장의 정보 및 의견 보고 필요

19)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총영사관 대외활동 건수 감소 및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 현황 저조 관련, 보다 적극적인 외교 수행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내 주 방위군 배치 계획 언급 관련, 현지 분위기 및 비상시 공관의 대응 방안 질의
경 제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내 K 그룹 등 현황 및 총영사관 지원 현황 질의 ○ 한미 인재들이 상호 네트워킹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관련 대응책 검토 필요 ○ 스타트업-VC 투자 연계 지원 성과 사례 질의 ○ VC 중심의 투자 생태계 조성 전략 관련 보고서 작성 및 관련 협업체계 구축 검토 필요
영사·기타	○ 공관 내 과학기술 전문인력 보강 필요 ○ 샌프란시스코 내 한인타운 형성 관련 검토 필요 ○ 관할 지역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구축 필요 ○ 프로 보노 변호사 단체 등과의 MOU 체결 등 선제적 현안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No King's Day 시위 관련 공관 모니터링 여부 질의 ○ 서류 미비로 인한 신분 불안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복지 점검 필요 ○ ICE 단속 위험 노출 교민 현환 질의 및 보호방안 모색 당부 ○ 교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관련 정보를 서비스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심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아시아인 대상 폭행 통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심리적 부담감 관련 공관 차원의 노력 질의 ○ ICE 단속 관련, 미 당국과의 소통 여부 및 관련 간담회 개최 현황 질의 ○ K-Food 진출 확대 관련 美 급식 내 한식 제공 등 방안 검토 필요 ○ 업무현황 보고 내 ‘장애우’ 표현 수정 필요 ○ 콜로라도 출장소 설치 관련 적극적 검토 필요 ○ 인력 충원 관련 상세 보고 필요

20) 주밴쿠버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총영사의 유콘준주 북극안보 포럼 참석 당시 내용 관련 질의 ○ 북극항로 및 에너지 협력 관련 캐나다 정부와의 협력 현황 질의 및 에너지 자원 외교 확장 당부 ○ 캐나다 서부지역 총영사관으로서 주정부 등과 정례협의체 운영 여부 질의 ○ 미국-캐나다 양국 갈등으로 인한 캐나다 거주 우리 교민 피해 및 불편 현황 질의 ○ 켈거리 출장소 개설 필요 ○ 배타적 전략으로서 인태전략에 매몰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 필요
경 제	○ 총영사관의 우리 기업의 통관, 물류, 세제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질의 ○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 진행 여부 질의“ ○ 캐나다 내 LNG 사업의 원활한 2단계 진행을 위해 공관에서 현지 정보 파악 등 지속 노력 필요
영사·기타	○ 워킹홀리데이 쿼터 증가에 따른 사건사고 현황 및 관련 공관의 지원 내용·체계 질의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마약 비범죄화 정책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 현황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질의 ○ 교민에 대한 SIN 발급 거부 사례 관련 신분 확인 시스템 필요 ○ 총영사관 차원의 교육원 설립 필요성 검토 및 노력 여부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미-캐나다 비자·이민 정보 공유 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와 사전 소통 및 협의 필요 ○ 총영사관의 민원서비스 관련 전화연결시간 등에 대한 일부 불만이 제기되는바, 개선 노력 당부 ○ 순회영사 관련 교민 반응 질의 ○ 한인사회와 협업하여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교민 사회 내 한국인 간 범죄 현황 질의

21) 주시애틀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현지 첨단기술 및 과학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관련 공관 역할 질의 ○ 시애틀 내 스타트업 관련 우리 기업 현황 질의 ○ 시애틀 내 과학기술주재관 상주 필요 ○ 포틀랜드주 방위군 배치 관련 공관의 역할 및 대응방안 질의 ○ 글로벌 보건 증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 기대 증가 관련 총영사관의 역할 당부
영사·기타	○ 한인 입양인 규모 파악 관련 공관 차원의 노력 여부 질의 ○ 총영사관 내 과학기술주재관 상주 필요 ○ 영사 업무에 대한 교민사회 내 민원 등 감소 노력 필요 ○ 관할지 내 탈북자 정착 지원 단체 관련 관심 당부 ○ 영사관 번호 조작 폰지형 금융사기 관련 총영사관의 예방 노력 여부 질의 ○ 아시아인 혐오범죄 증가 현황 및 대응 관련 他 아시아 국가와의 협업 가능성 질의 ○ 교민 수 대비 저조한 재외국민등록률 관련 대책방안 질의

22) 주네덜란드대사관겸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이 민간 사비로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해 정부 매입·직접/위탁관리 등 장기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네덜란드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편향 서술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점검 필요. ○ 오류 시정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웹사이트 한국 소개를 상시 점검하며 한국 관련 기술 확대 노력 병행 필요 ○ 의전 문제로 대사 초치된 사안 관련 재발 방지 및 양국관계 강화 노력 당부 ○ 박연·하멜 등 친한단체·친한인사 네트워크 관리·강화 방안 질의 ○ 지자체 교류 과정에서 정부 외교정책과 상충 소지 발언 방지를 위한 지자체 외교활동 가이드라인 필요성 질의 ○ ICJ(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련 우리 후보 당선 가능성 및 대응 방향 질의 ○ REAIM 등 AI 군사적 이용 논의에서 한-네덜란드 주도 적절성 및 포괄적 규범화 필요성 관련 질의
영사·기타	○ 공관·관저 국유재산 여부 등 자산 현황 질의

23) 주독일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러-우 전쟁 장기화 전망, 독일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대러 제재 강화 관련 입장 및 주재국 여론 점검 질의 ○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등 관련 우리 정부 역할·성과 질의 ○ 독일 내 통일 담당 조직 규모·예산 등 질의 ○ “독일 통일 교훈을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공관 입장 질의 ○ 베를린 소녀상 이전(철거) 문제 관련 우리 정부 대응·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기억문화 협력사업 강구 필요 및 소녀상 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중개·조정 역할 가능 여부 질의
경 제	○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공급망 변화 속 한-독 경제협력 시급 분야 및 협력 확대 방안 질의 ○ 경제기후보호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의 명칭 변경 배경 및 여론 질의
영사·기타	○ 한인단체·진출기업·유학생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활동 추진 현황 질의 ○ 독일의 비자거부 이의신청 제도 폐지로 인한 불편·피해 및 대국민 안내/공지 필요 ○ 공관·관저 국유재산 여부 등 자산 현황 질의 ○ 해외 교과서·웹사이트 한국 관련 오류/편향 내용 상시 점검·시정 필요

24)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점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NATO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합의의 실질 이행 가능성 질의 ○ 한-NATO 방산협약체 및 EU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한 한-유럽 방산협력 전망 질의 ○ 주NATO 대표부가 인력 4명 수준인 점을 고려해 별도 상주대표부(상주대사) 필요 ○ 러-우 전쟁 장기화 전망, 러시아 핵 사용 가능성 및 EU의 대러 제재 효과 질의
경 제	○ EU-미국 무역합의에 따른 신규투자(6,000억불)·에너지 구매(7,500억불) 추진계획 점검 ○ EU-미국 무역합의 이행 구조 및 철강 협상 진행 상황 질의 ○ EU의 대중 디리스팅 기조 지속 여부 질의 ○ EU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비교적 원만히 마무리한 협상 성공 요인 질의 ○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EU 내 ‘대미 대항 연대’ 움직임 존재 여부 질의 ○ CBAM(탄소국경조정제)·공급망실사법 대응 관련 기업의 준비·애로 및 공관 대응 질의 ○ EU의 과학기술·AI 정책(세계 최초 AI법, AI 이니셔티브/AI 대륙 행동계획 등) 대응 현황 질의 ○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따른 EU 인재유치 분위기 및 EU 블루카드 관련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영사·기타	○ 공관·관저 국유재산 여부 및 (벨기에) 청사 공간 부족/노후에 따른 청사 이전 검토 현황 질의 ○ 해외 교과서·웹사이트 한국 관련 오류/편향 내용 상시 점검·시정 필요

25)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교류협력 행사에서 지자체장 발언이 정부 외교정책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및 지자체 외교활동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질의 ○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복원(전소) 사업 예산(20억) 적정성 및 추진상 애로 질의
영사·기타	○ 관할 지역 사건·사고 급증 원인 및 질의 ○ 현지 이민자 혐오/반감 정서 등 치안·안전 환경 질의 ○ 체류허가/영주권 발급 지연 등 체류 관련 민원·애로 현황 질의 ○ 해외 교과서·웹사이트 한국 관련 오류/편향 내용 상시 점검·시정 필요

26) 주룩셈부르크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공관 신설 배경·필요성 및 국민이 체감할 이점 및 홍보 방안 질의 ○ 교과서 내 “1760년경 한국은 스페인의 식민지” 등 역사 왜곡·오류 시정 필요
영사·기타	○ 금융 중심지 특성 대비 공관 업무 니즈에 비해 인력·지원체계 확충 필요 지적 및 지원 강화 방안 질의 ○ 공관 개관·시설 보수 등 진행 상황 및 추가로 필요한 지원사항 질의

27) 주덴마크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경 제	○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의 성과(해운·재생에너지·수소 등) 및 향후 발전 방향·국민 체감 제고 방안 질의
영사·기타	○ 덴마크 내 한인 입양인(약 8,000명) 관리·지원 강화를 위한 공관 역할 및 추진현황 질의 ○ 젊은 입양인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정체성 지원을 위한 공관 역할 질의 ○ 공관·관저 국유재산 여부 등 자산 현황 질의 ○ 해외 교과서·웹사이트 한국 관련 오류/편향 내용 상시 점검·시정 필요

28) 주제네바대표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AI·우주·양자 등 신기술 분야 新거버넌스·국제표준·규범 수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거버넌스가 공정하게 수립되도록 논의를 주도할 필요 ○ 북·중·러 협력 강화,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등 최근 역학 변화가 대북제재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공관 견해 질의 ○ 미국의 유엔 분담금 미납 등으로 재정난·인력난이 커진 상황에 대한 질의 ○ 북한 4주기 UPR 계기 납북자 석방·고문 등 비인도적 행위 중단 촉구가 실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대표부 차원의 구체 계획 질의 ○ 한국이 2025~2027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인바, 조직 기능 유지를 위한 개혁 방향 질의 ○ ‘한국 드라마 시청 이유 30여명 처형’ 발언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례 관련, 북한인권 관련 정보는 사실 기반·교차검증된 자료만 활용하고, 근거 없는 낭설로 결의 추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요청 ○ 북한인권 발언문에 포함되는 처형 등 실태가 대표부의 별도 조사인지, 아니면 OHCHR 보고 등 객관 자료 기반의 공식 입장인지 질의 ○ 2025.9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제출된 북한인권 포괄적 보고서의 작성 주체(COI 작성 여부) 및 보고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이사국으로서 관여·의견 개진 여부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야에서 북한 정부 안팎 행위자 관여를 견인할 방안 질의 ○ 현 정부 AI 글로벌 전략에 대해 대표부 차원의 이해 제고 요청
경 제	○ Gavi 6.0에 5,000만불 공약 및 11월 글로벌펀드 재정보충회의 공약 필요성을 전제로, 기여 유지·확대 노력 필요와 함께 글로벌펀드 공약 관련 현지 분위기 질의 ○ 글로벌 보건기구 기여가 우리 기업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 필요 ○ ODA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요 공여국의 축소 기조 속 우리 정부의 개혁·통합 노력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한국 ODA 평가 및 ODA 정책 개선 방향 질의 ○ 경제 규모 대비 ODA가 부족하므로 ODA로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표부 의견 질의 ○ WTO 분쟁해결 제도 보완을 위한 MPIA(복수국간 임시상소중재 약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 질의 ○ MPIA 미가입으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 및 대책 질의 ○ ITU에서 한국의 6G 표준 논의 참여 상황 질의
영사·기타	○ 청년들의 정보 접근 한계를 고려해 외교부 주도의 국제기구 진출 플랫폼 신설 등 적극 지원 필요 ○ 다자외교에서 수동적 입장을 벗어나 비전을 갖고 기여해야 하며, 특히 경제·기술 규범/국제표준 형성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자외교 국익증진 방안 구상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리더십 확보, 유엔 개혁 주도 전략, 본부·대표부의 조직·인력 대비 및 UN80 의제 중 한국 주도 가능 분야에 대한 구상 질의 ○ 국제기구별 거버넌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국내 보고 체계 강화 및 국회 공유 필요 ○ 대사로서 체감하는 다자외교 수행의 어려운 점 질의

29)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국제기구 진출 희망 청년 증가에 따라 외교부·재외공관이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할 필요 ○ 우주·AI 등 신기술 분야 표준·규범 논의 확대에 대비한 주도적 참여 필요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북·중·러 밀착 등 국제정세 급변 속 다자외교의 전개 방향에 대한 공관 견해 질의 ○ 우리 다자외교의 지평 확대 및 국익 증진을 위한 구체 방안 질의 ○ 내년 서울 개최 예정인 원자력 장관회의 관련, 다수 국가 참여를 이끌도록 적극 홍보 필요 ○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현 국제정세 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 등에 대한 공관 견해 질의 ○ IAEA 총회 기조발언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SMR 관련 상반된 메시지가 나간 점을 지적
경 제	○ 주재국 내 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술(서술) 현황 질의 ○ 한-오 경제협력포럼 개최, 도로주행시험 면제 등 성과 평가와 함께 양자관계 개선 노력 지속 필요 ○ 최근 5년간 대(對)오스트리아 무역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 질의 ○ 우리 수출 촉진을 위한 조치 질의 ○ 대기업의 대오 투자 규모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현지 진출기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 청취, 공관 차원의 적극 지원 및 필요 시 국회 협조·공유 필요
영사·기타	○ 24시간 영사조력 체계 가동 방식 질의 ○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야간 민원 대응 보도와 관련, 대사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견해 질의 ○ 우리 국격에 맞는 청사·관저 필요성을 전제로, 청사 이전 부지 확보 이후 후속조치를 적극 취할 필요 ○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 대응 필요

30) 주모로코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K-컬처 확산 사업의 추진 결과(사업내용·참석자·성과) 평가 및 환류 실시 여부 질의 ○ KF 모하메드5세대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 예산 삭감 관련 입장 질의 및 한국어 교육 확대 예산 확보 필요 ○ 모로코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 확대 추진 애로사항 및 방한연수 등 지원 실시 여부 질의 ○ 정부초청장학생(GKS)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관리 방안 질의 ○ 아프리카 권역별 공관장회의 정기 개최를 위한 예산·제도 마련 및 개최 재개 필요 ○ 공무원 초청연수 등 연수사업 사후관리 강화 및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경 제	○ 한-모로코 EPA(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및 모로코측 소극적 태도 대응방안 질의 ○ 모로코 진출 우리 기업 지원 실태 및 애로 해소 지원방안 질의 ○ 해수담수화 사업 프로젝트 등 대형 인프라 분야의 우리 기업 참여 확대 및 대사관 지원방안 질의 ○ 방산협력 성과 저조 사유 및 우리 방산기업 지원·성과 제고 방안 질의 ○ 특허청 행정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등 ODA 사업 확대 계획 및 후속사업 발굴 방안 질의
영사·기타	○ GenZ 시위 등 현지 소요 상황 대응 및 우리 국민 안전대책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임에도 K-ETA 불허 통보가 발생하는 사유 질의 및 제도 개선 필요 ○ K-ETA 불허로 비자신청 증가에 따른 영사업무 과중이 발생하는 바, 행정직원 증원 등 인력 확충 필요 ○ 소규모 공관의 24시간 사건사고 대응체제 운영 체계 및 악성민원 대응 방안 질의 ○ 본부의 공관 지원·관심(지시·협의·전문 등) 실태 질의

31) 주튀니지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반정부 시위 등 현지 정세 동향 및 향후 전망 질의 ○ 튀니지의 방산협력 희망 배경 및 협력 가능성 질의 ○ 보건의료 분야 협력 희망 배경 및 보건장관 방한 시 논의된 구체 관심사항 질의 ○ 한국학(KF) 예산 삭감 예정에 대한 입장 및 한국학 지원 유지·확대 필요
경 제	○ 전자조달 시스템 등 전자정부 ODA 사업 추진 경위 및 성과·확대 방안 질의 ○ 정부 장학생 및 KOICA 연수생 등 방한 인사 관리·네트워크 유지 방안 질의
영사·기타	○ 소규모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즉응태세 및 보호체계 교육 운영 실태 질의 ○ 2025.7. 대규모 시위 대응 조치 및 위기대응 매뉴얼·현지기관 협조·기업 리스크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여부 질의 ○ 행정직원 인건비 문제의 원인 및 인력감축 등 대안 검토 필요

32) 주튀르키예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교과서 문제 관련, 오류 시정 수준을 넘어 한국 발전상을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 수행 필요
경 제	○ 한-튀르키예 FTA 개정·발전 논의 착수 여부 및 발전 방안 질의 ○ 양자 FTA를 넘어 다자간 무역협정 연계·확장 가능성 및 추진 전망 질의 ○ 알타이 전차 협력 모델의 유럽 확산 가능성과 정부·대사관 역할 질의 ○ 현대차 전기차 생산·유럽 진출 전망 및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보조금·세제 혜택 등 여건 질의 ○ 튀르키예 경제 정상화 여부 및 향후 전망, 경제정책 방향이 우리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 점검 필요 ○ 원전 수주 가능성(기술·비용 경쟁력) 및 시놉 원전 추진 일정, 웨스팅하우스 합의 적용 범위, 협상 의지 질의 ○ 원전 협상 촉진을 위해 고위급 소통 및 대사관 정보 공유를 통한 조율 강화 필요 ○ AI 등 차세대 협력 모델을 현지 여건을 고려해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필요
영사·기타	○ 방문객 급증('22~'24 증가) 추세를 반영한 '25년 방문객 전망 및 사건사고·안전대응·예방조치 강화 방안 질의 ○ 마약 관련 범죄·수감 실태 및 사법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공관 인원 감축 사유 및 영향력 확대 상황에서 정무·경제 대응 역량 저하 방지 필요

33) 주이스탄불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급증 배경 및 공공외교 시사점 질의 ○ 에르도안 정부 야당 탄압 등으로 소요 사태·주식시장 급락 등 불안정성 재발 가능성과 전망 및 관련하여 본부의 지침 여부 등 질의
경 제	○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 및 공관 차원의 관리·지원 필요성 질의
영사·기타	○ 이스탄불 방문 우리국민 증가에 따른 예방조치 강화 및 대응 방안 질의 ○ 24시간 대응체제 운영 시 긴급전화 수신·당직체제 및 당직 직원 응대교육 실효성 질의 ○ 주택임차료 상한 조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상 급지 조정 본부 협의 진행 여부 질의 ○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리 수요 확대 대비(여행사 협력 포함) 및 인력 부족 상황의 대처 방안 질의 ○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및 추모공간 건립의 예산 적정성 및 보훈부 사업 해당 여부 질의

34) 주레바논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시리아까지 관할하는 공관의 인력·예산 부족 상황에서 분쟁 취약 지역 정세 분석·모니터링 보강 및 인도적 조정관 등 추가 충원 논의 필요 ○ 시리아 수교 이후 공관 역할·업무 증가에 대한 점검 및 지원 강화 필요 ○ 시리아 대사관 개설 필요성 및 서방 제재 해제 여부·정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개설 판단 기준 질의 ○ 레바논 내 헤즈볼라 동향 및 남부지역 긴장 지속 상황에 대한 평가 질의 ○ 휴전 이후에도 불안 지속 상황에서 교민 대피 이후 교민 증가 배경 및 동명부대 철수 동향 질의 ○ 시리아 치안·정치(HTS 출신 대통령 등) 동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정보담당관·국방 인력 등 추가 인력 필요
경 제	○ 시리아 경제·산업부 장관 면담 결과 및 면담 추진 경위, 관계부처 협의 진행, 및 진출 리스크·희망 기업 존재 여부 질의 ○ 한-시리아 경제협력 및 우리 기업 진출 희망 기업·상황 파악 여부 질의 ○ 금융·의료 등 소프트 인프라 재건 참여 가능성 및 디지털 기반 차세대 인프라 재건 협력 집중 필요
영사·기타	○ 레바논 거주 교민 안전 점검 방식 및 성지순례 등 방문객 증가 시 대응 체계 질의 ○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 기업 존재 여부 및 예외 허가 기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표준화·본부 협의·의원실 공유 필요 ○ 비전투원 철수 협의체(NEOCG) 및 MTC4L 읍서버 가입 배경·목적 질의

(나) 산하기관

1) 한국국제협력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원사업	○ 민관협력 ODA 비중이 낮다는 점에 대한 개선 필요
기관 운영	○ 코이카의 경영실적 평가 미흡, 직제규정 위반 조직 운영, 인사·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종합대책 마련 필요

2) 한국국제교류재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원사업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역점사업인 해외 정책연구 지원 사업 결과물 및 연구보고서를 전문가 및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 및 정부 정책연구포털에 공개하도록 점검 및 시정 필요 ○ KF를 통해 운영 중인 11개 양자·다자 포럼 사업과 관련, 회장 선임·평가·예산 배정 등 운영규정이 전혀 없고 전관예우식 구성으로 주먹구구식 운영되는 문제 지적. 전체 점검과 필요 시 신규 포럼 기획 필요성 질의
기관 운영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과도한 출장, 예산 집행 부적정, 교육훈련비 부당 사용 사례를 지적하며, 외교부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종합대책 마련 필요

3) 한.아프리카재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관 운영	○ 2023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예산 규정이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국귀빈 대상 행사의 경우 오·만찬 집행단가를 현실화하라는 것이었으나, 지출한도를 없애버린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관련 외교부 감사 시 교류협력부 부장에 대한 징계로서 경영기 확실히 부장으로 전보조치하였는데, 징계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임을 지적

나. 통일부 소관

(가) 통일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통일 및 대북정책	○ 2025 경주APEC회의 관련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필요 - APEC 계기의 북미대화, 내년 초 트럼프의 방중 성사 시 북미대화 촉진에 통일부 역할 당부 -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파주 판문점이 적정하다는 의견 - 북미 정상 회동을 전제로, 한미간 의견 조율을 위해 통일부가 외교부 등과 심도있는 의제 선정·조율 진행중인지 질의 - 북미정상회담에 낙관적 전망만 하고 있다는 지적 - 미국의 북한 제재가 중단될 경우 한국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북한 핵문제를 정상회담에 일임하는 것은 위험하고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 한미협상, 북미협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되,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득방법 고민 필요 - 북한은 성과(핵보유국 인정, 제재완화) 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북미대화는 머잖아 추진될 것으로 보임. 북핵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바, 핵무기가 동결되면 미국은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위협이 남는 것인데, 자칫 ‘코리아패싱’이 우려된다는 의견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자협력 모색 필요 -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한 봉남통미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미북이 대화하는 것을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 평화공존, 교류정상화, 신뢰구축 조치 등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는 북한과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 - 냉정한 현실인식에 기반하여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의견 - 당사자(한국)가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간 회담(북-미)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지적 - 경주에서 북미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다음 기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북미접촉 의제가 다루어질 때 북한 관광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도 포함 필요 - 김일성종합대 홈페이지의 최신 논문(2025.6.)에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소개 등 관광개발과 맞물려 외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부 동향이 나타나바,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준비 필요 -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내 핵무장 논리가 제기될 수 있는 바, 북미대화로 물꼬를 튼 후에는 우리나라가 주도권 확보할 필요 ○ E.N.D. 구상 관련 -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제시한 E.N.D.[Exchange(교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Normalization(관계정상화), Denuclearization(비핵화)] 구상은 통일부의 아이디어이고 대통령실(안보실) 의견과 출동하는 개념이라는 지적 - 세 개념의 순위(순서)가 있는지, 비핵화(D)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류(E), 관계정상화(N) 의미에 대한 질의 - ‘교류’와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규범 통합과 중국·러시아 외 교류를 통한 상호의존 설계가 핵심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출발점(인도적 지원 확대, 다자기구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의지도 중요하고 과학기술 등 다양한 교류도 포함되어야 하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국가 내에 특정 구역(zone)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원칙은 무엇이고, 북한 제재를 해제하자는 트럼프 주장에 대한 현 정부 입장에 대한 질의 - E.N.D. 선언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 - E.N.D.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이 될까 우려되므로, 세심한 관리 필요 - 양자 관계가 경색된 현재 상황에서는 다자간 관계로 상호의존성을 높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가 있고, 대북 제재(sanction)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 ○ “두 국가론” 관련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과 통일부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의 차이점, 정부 공식입장에 대한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북한이 선대유훈을 뒤집고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한 것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라는 ‘흡수통일론’의 반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발언은 핵을 가졌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견 -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 포기가 아니라 특수관계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맥락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북인식이라는 의견 - ‘평화적 두 국가론’은 현행 헌법의 영토규정 및 평화통일 추진 조항과 배치되어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은 “잠정적 특수관계이지 두 국가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의도된 역할 분담인지 질의 - 두 국가를 인정하게 되면 통일부는 노력할 상대가 없어지게 되고, 외교부 내 산하기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 - 지방선거(2026. 5.) 전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질의 - ‘평화적 두 국가론’은 상식적 논의인데, 일부 세력이 기득권 유지, 적대적 공생을 목적으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 - 우리가 ‘당사자’이지만, 북한이 미국과 화해하지 않으면 평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중재자’라는 의견 - 독일의 통일 관련 부처(양독연방관계부) 규모가 커졌다는 증거자료 제출 필요 - 분단 45년만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과, 분단 80년이 지나고 있고 남북간 경제 규모 격차,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여러 요건을 고려할 때, 독일통일 사례를 한반도의 통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 - 대치하는 두 국가가 장기 통일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구 서독과 대한민국이 궤를 같이 하고, 분리 현상을 고착화하려는 점에서는 구 동독과 북한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의견 - ‘평화적 두 국가론’은 NSC 등 내부 논의 단계에 있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므로, 장관이 국회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 - ‘평화적 두 국가론’은 헌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 - 찬반 논쟁이 뜨거울수록 참여가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수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의견 - 남북한 UN 동시 가입(1991)으로 국제관계에서는 두 국가 지위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남북간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두 나라가 아닌) 통일로 가는 두 개의 실체라는 지적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북한이 주장한 3대 선결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우리측 문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인 바, 협상에 성공한 3가지 조건(유리한 국제정세 여건, 북한 스스로의 대화의 필요성, 국민적지지와 관계부처간 협조) 유의 필요 -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차하면 핵공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하였는데, 북한은 대한민국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는 장관 인식에 대해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통일부장관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등과 견해 차이가 있어 정부 내 의견 일치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 - 각별한 인연 때문에 대통령이 통일부장관을 컨트롤 하지 못한다는 여론(언론기사)이 있다는 지적 - 정치인(국회의원)과 내각 관료(장관)로서의 행태는 달라야 하고, 외교안보에 있어서 각료는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 노선을 따라야 할 것인 바, 기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 -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적대관계, 교류협력관계)이고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이지만, 국내법 체계와 얼마 전까지의 북한 입장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현상이 있는 현실에서 장관이 균형을 잡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 -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은 부처별로 집중하는 영역이 달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맹에 대한 부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주파 vs. 동맹파 논쟁은 사악한 프레임이라는 의견 - 자주파 vs. 동맹파와 같은, 낡고 오래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 - 두 국가론 논쟁이 참여의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의견 - 두 국가론을 현 정부에서 공식화한다면, 개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 월간중앙 인터뷰(2024. 10.) 당시에는,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가 1년 사이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남북기본합의서의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이라는 문구는 당초 북한이 제안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역제안한 상황으로, 향후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의견 - 두 국가론으로 전환할 경우, 군사분계선 북쪽을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으로 불러야 하고 우리 정부나 방송, 교과서의 호칭도 모두 변경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 - 두 국가를 인정할 경우,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 되어 우리 헌법이나 법률을 바꿔야되는 상황이라는 지적 - 화해와 협력 차원의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보수와 진보를 함께 포용하는 정책 추진 당부 - 남북문제에 관하여는 여야가 손잡고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 -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이라 하는 이유는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공격용, 전쟁연습이라 여기기 때문인바, 평화를 위해 연합 훈련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보수정부인 노태우정부(1989)에서 처음 제안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김영삼정부(1994)에서 발전시킨 것이고,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회담(2000) 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등 역대 보수정부들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통일방안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야당이 하고 있다는 지적 ○ 북한과의 협상은 튼튼한 국방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고,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독일통일구상과 같이 정권 변동에 상관없이 일관된 정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 필요 ○ 빌리 브란트의 ‘1민족2국가’ 핵심은 상호존중과 인정이었고, 헌법상 평화통일 수호와 ‘두 국가론’은 병행될 수 있다는 의견 ○ 국정과제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독일기본조약(1972)을 참고한 구상으로 보임. 상호 존중 하에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이 독일의 모델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모델이라는 의견 ○ 2025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반대’ 의견이 15%인데, 반반 내지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30%에 주목하고 이 계층을 정책의 타겟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 통일부의 유튜브 채널(UNI-TV) ‘평화의 시작, 일상의 소리’ 영상 조회수 1100만임에도 댓글은 90개 정도(조회수와 댓글수는 비례)이고 대부분의 시청자가 광고를 통해 간접 접속, 주된 시청자층도 만 55세였음. 다른 부처에 비해 광고의 효과성이 낮아 청년층을 타겟으로, 좀더 직관적인 콘텐츠로 정책 홍보 필요 ○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북경 전승절(9.3.), 북한 당창건 80주년(10.10.) 기념행사 등을 보면 북한의 핵능력이 급 향상되었다고 평가되는데, 이전 정부의 제재도 실효성 없었다는 지적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평가(북한 핵무기 20기 → 50기, 매년 10기 이상 늘릴 수 있는 보유량 확보)에서, ‘담대한 구상’이나 ‘자유 의 북진정책’으로도 북한의 핵능력이 2배 이상 고도화된 것인 바, 핵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압박·대북제재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의견 ○ 사실과 평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북한은 핵보유 국가’가 정부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공식 입장인지 질의 ○ 북한의 태도 변화 또는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의 협조만이 아니라 우리 동맹국 및 대내적 지지 기반도 중요하다는 의견 ○ 남북이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채택을 위해 협상하던 시기(1991)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대화 시기에는 핵개발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틀렸다는 지적 ○ 자체 핵무장·핵보유 관련 - 북한의 핵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보유 논의 필요 - 우리나라는 미군 주둔,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자주 역량 및 억지력 차원에서 장기적 구상으로 핵보유 검토 필요 - 평화공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쌍방 간의 균형을 전제로 가능한 바, 핵을 이미 보유한 북한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북한이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장관(송○순)도 핵보유국으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북한에 대응하여 ‘잠재적 핵 능력 확보에 나서야 할 때’라고 하였다는 의견 - ‘북한붕괴론’ 주장자 빅터 차의 2023년 CSIS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관계가 단절된 시기에 북핵이 고도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화·교류가 핵 개발의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으나 최소한 잠정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적으로 보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 - 하노이 회담(2018) 때와 달리 북핵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등 대안을 포함한 다자적 관점의 접근 필요 - 인도-파키스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압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 -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 재래식 무기가 압도적 우위라는 점에서 소위 ‘전략균형’이 가능하므로 핵보유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의견 - 장관의 뜻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니 우리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여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그 방법이 좋지 않다는 지적 ○ 이전 정부에서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 ○ 한반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하이 협력기구, BIRCS 등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건 어떠한가는 주장도 있는데,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남북교류 협력	○ 남북관계에서 정부와 NGO는 실패했지만 기업은 성공했다고 보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기술 공유를 통해 북한을 외부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구체적인 위험 감축, 평화의 제도화, 협업 트랙 확대 등을 위해 군통신선 상시화, 사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격훈련 통지·재가동, 영사 통보 기능 복원, 연락사무소 복원 등을 준비하고, 수해나 산불, 미세먼지 등에 공동 대응하는 TF, 정치·군사와 분리된 소위 ‘세이프티 밸브’ 확립 필요 ○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평균집행률이 1.4%에 불과한데도 내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2025년 605억 → 2026년 1,789억원)된 바, 북한의 두 국가론, 철도 연결구간 폭파 등의 상황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동의 않는다는 지적 ○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기금이 마중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 ○ 남북관계와 관련된 민감정보와 관련하여 위성정보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 ○ 2000-2007년 대북차관(9억 3,330만 달러) 이후 현재(2025. 8.) 북한은 99%를 갚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 ○ 장관의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언론이 대서특필했는데, 어떤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는지,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 유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합의된 화물열차 개통 관련, 현대아산이 자재와 장비를 선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기재부가 절차 흠결을 이유로 지급 거부한 바,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하여 통일부가 1심 패소(24년 7월) 후 약 90억원(원금 38억원, 지연손해금 51.4억원)을 지급한 바, 대국민 사과 필요 ○ 북한주민과의 무제한 접촉 허용 방침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배치된다는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10년간의 금강산 및 개성 관광 객 수로 미루어 5억 788만 달러가 북한에 유입되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바, 북한관광 재개 시 핵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향후 북한관광 재개 시 국민 안전대책이 있는지, 제재를 우회하여 송금 가능한지, 북한방문 이력이 있으면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 ○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남북공동 또는 WHO를 통한 제3자 방식 등 방역 필요 ○ 최근(2025.9.) 우리농사서로돕기협동조합에서 시도한 북한 술 2종(고려된장술, 들쭉술) 3,500병 국내반입 승인과 관련하여, 5년 전에도 제재대상 아닌 줄 알고 반입하다 국정원의 문제 제기로 반려된 바 있는데, 제재대상 여부, 원산지 문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 대동강식료공장(고려된장술), 류경공장(들쭉술)이 39호실 산하 외화별이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재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반입 승인에 식약처의 수입식품 안전 담보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지적 -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해 통일부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였으나, 반입승인서의 선적항이 DA(다렌)으로 표기된 바,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인지, 환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관련, 2009년 이후 송금이 중단된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북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한 바 통일부 차원의 관리 필요 - 경문협 수수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실무진이 거부한 바, 국회증언감정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므로 자료제출 필요(10.14.) - 저작권법에 따른 수수료(어문 20%내외, 방송 및 기타 저작물 35% 내외)를 총 공탁액 기준으로 역산할 경우 10억 3958만원~22억 3,600만원으로 추정됨. 북한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직접 송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탁하고 있으나, 10년 경과 이전에 뺏다가 재공탁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10.28.) ○ 한미정상회담(2025.8.) 당시 ‘북한에 트럼프월드 하나 지으라’고 하였는데, 대통령의 투자 권유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 ○ 다자협력의 틀이 남북협력의 효율적인 기회인바,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사업 활용 필요
북한인권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관련 - 당초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지어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전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전면 백지화한 후 남북관계 또는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 필요 - 북한인권센터 명칭, 전시내용 및 성격 재검토 등을 통해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가칭 ‘한반도평화교류센터’ 등 검토 필요 ○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증언의 최신성·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두 차례의 발간 내용이 차별성 없이 중복되며, 특정한 진술 및 특정지역 출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 - 객관성·신뢰성이 부족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아니한 편향된 보고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계속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 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가 비판을 받으니 생산하되 미공개로 전환하였는데, 발간 및 공표를 통한 국제적 여론 조성 필요 ○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보고서 관련 - 전 통일부장관(김○호)은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임을 강조하면서 각종 강연 또는 방송 예능에 출연하여 객관성을 강조하였으나, 문항별(경작 경험, 휴대전화 이용 여부 등)로 표본수 등이 다르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내용으로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 - 이 책자를 기반으로 제작한 각종 웹 콘텐츠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미 국무부에서도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 ○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한 고문, 강제노역, 공개처형 등에 대해 묵인하지 말고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관련 - 동 사업은 통일부가 ‘북한인권부’로 비난받게 된 보조사업인데, 북진통일을 주장하거나 ‘북한주민 의식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보조단체인 거래열통일연대 면담결과보고서에서 ‘돈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동 사업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총 30개 단체를 보면, 3개 이상의 단체에 대표 또는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2명, 2개 이상의 단체에 9명인바, 소수의 극우성향 인사에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 - 2023년 인권증진사업 18개 단체 중 해를 넘겨 집행한 곳이 5곳(국제학술원은 800만원 추가 지급)인데, 불법·편법이 있었던 사업은 중지되었다고 그냥 덮을 수 없다는 지적 - 세이브NK, 리버티케이, 국제학술원 등 명칭만 다르게 7가지 사업에서 중복적으로 사업비를 받았고 사제관계, 부부관계 등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 보조금 부정사태가 많아 중단된 사업일지라도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 통일부는 본연의 통일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북한인권 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 필요 ○ 통일부로부터 이○훈 위원장이 지원(1억 5천만원) 받아 추진한 ‘인권현인대화’ 행사 한달 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리버티케이’라는 업체에 3,300만원이 지급되는 등 공개경쟁이나 계약서 없이 이중지급되어 ‘정권실세 용돈 챙겨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조사 필요 ○ 북한인권 실상을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한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의 참여자 수가 적고, 제작된 영상 콘텐츠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는 지적 ○ 2023-24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인권순회 전시회에 통일부가 국방부에 제공한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가 사용되었다는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인권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질의 ○ 북한인권재단 관련 -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단 출범을 위해 통일부가 추진한 이행실적이 없고, 여야간 합의는 국회에서 하지만 주무부처가 법 개정만을 기다리고 노력하지 않음을 지적 - 북한인권법(2016년 제정) 시행 9년이 지나고 있는데, 법원 판결 및 인권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고 주무장관으로서 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인권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고, 남북이 인권을 협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단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
대북·대남 전단	○ 대북전단 관련 - 대북전단 살포는 북의 오물풍선 맞대응, 평양 무인기로 이어져 남북대결의 상징이 되었다는 지적 - 전단, 페트병(쌀) 살포 단체 등과 면담한 통일부 문건(2024. 4월~7월, 결과보고서)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조장한 측면이 있고, 북한군인들에 대북확성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단체대표의 발언(5.27.) 이후 실제로 대북확성기가 재개(6.9.)되었는바, NSC 회의를 통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일부가 확인할 필요 ○ 대북전단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보낸 것이고 헌법재판소와 인권위의 결정도 있었는데, 북한의 무인기 도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는 대응하지 않아 장관의 별명이 ‘북한 대변인’이라는 의견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이산가족 및 인도적 문제해결	○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채 이산가족이 고령화(70세 이상 85%)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 인도적 교류로서 이산가족 상봉, 대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 ○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비전향 장기수와 교환하는 방법 제안할 필요 ○ 인도적 위기 관련, 탈정치화하여 북한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2009)에 따르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23명)에 ‘사상 전향’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회유를 일삼아 헌법 정신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3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바, 42년간 복역한 노병(안○섭, 95세)의 무조건적 송환을 위한 계획 필요 ○ 남북자대책팀이 이산가족납북과로 통합된 바, 남북자 문제가 이산가족 상봉 업무에 뒷전으로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 ○ 남북자대책팀 해체로 국제사회의 공조 모멘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대책 필요 ○ 전시납북자단체, 전후납북자단체, 억류자 가족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내외 관심 고취는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바, 그 책무를 상속한 김정은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
북한이탈주 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 북향민, 실향민 등 용어 관련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설문조사 했다는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상황(고용률과 상용직 비율, 어려운 정착과정 등)이 20년 전과 변함없는 실정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탈북민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초기 정착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탈북민 관련 데이터, 취약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 문제(자살, 우울, 불안 등) 해결할 수 있는 AI 기반의 복지시스템 등 구축 필요 ○ 성공한 탈북민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으로 소수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 고립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지적 ○ 경제적 빈곤 외 정서적 고립으로 자살률, 기초생활수급률 등이 일반 국민의 4-5배이지만, 지자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 등 지원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는 지적 ○ 현재 탈북민을 대하는 우리 국민의 시선이 북한인권에 대한 바로미터이고, 통일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 ○ 탈북민 지원에 신청주의를 없애고 생애주기별, 정착주기에 따른 과업별 선도적 지원 필요 ○ 북한배경학생(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관련 - 2025년의 경우 11개 교육기관에 101억원 지원했지만, 관리·감독기관이 통일부, 교육청, 지자체로 나뉘어져 지원된 학교 실태(예산 유용·남용 사례들)를 보면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 - 한겨레중고등학교 등 기숙형 특성화 학교의 경우, 학생 기숙사 절반을 교직원이 사용하는 등 시설관리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 - 학교 임대료 수익을 법인이 기부금으로 편취하거나 불필요한 설계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 등 지적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사의 편향된 SNS 내용(12.3계엄은 나라를 위한 일,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 참석 독려 등) 지적 -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의 성추행 사건 관련 지적 - 통일부가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필요 -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필요 - 보조금이 지급되는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및 교육기관에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관할 교육청, 도 교육청, 교육부 등으로 책임 미루기가 반복되고 있어, 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과 관련한 제출자료가 신뢰성 없다는 지적 ○ 북한배경학생을 위한 국공립 교육기관 설치 필요 ○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교육부로 일원화 필요
통일교육	○ 최근 몇 년간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통일의식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평화통일 교육 및 시민참여를 통해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하다는 의견 ○ 자손군(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도서「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등으로 왜곡된 역사를 전파한 리박스쿨 협력단 관련자가 제24기 통일교육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촉 필요 ○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이자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김○우) 관련, 2023년부터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4억 6,400만원의 보조금이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지급되었는데, 극단적·편향적 발언을 하는 인사가 이끄는 단체에 보조금 교부는 적절하지 않고, 통일교육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해촉 필요 ○ 국립통일교육원의 도서집필 예산 관련 - 최근 JTBC에서 방영된 내용으로, 용역사업에서 도서 발간 없이 주○환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보은(報恩) 성격의 ‘용돈 챙기주기’로 보인다는 지적 - 현 교육원장 취임 이후 김○철 등에게 집필 의뢰하였다가 친일사관, 객관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미발간된 사례 지적 ○ 통일교육원의 해외전문가 초빙교수 사업 관련, 4월에 특강을 한 스칼라티(G. Scarlatoiu)는 극우적인 주장을 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외부인사 선정시 유의 필요 ○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하고 교육 실시대상도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주체들이어야 한다는 의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교육을 할 경우 장관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는 실제 고발사례가 없고 교육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약이 아니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교수 평가 시, 강의시간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무시하였고, 선거기간 중 편향된 인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했다는 점 등에서 교육원 감사 필요
통일부	○ 통일부 명칭 변경(평화통일부, 남북관계부 등) 논의가 있었지만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조직개편 등	「정부조직법」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장관 임기중 재추진 여부 질의 ○ 오늘(10.14.) 발표된 조직개편 추진 방안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통일부가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조직개편으로 인력은 복원되었으나, 남북관계 관련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유출되어 실제 경험이나 노하우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범정부적 대책으로 기존 우수인력을 충원하거나 외부 전문가 활용하는 방안 필요 ○ 통일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처인만큼 방향성 설정과 국민적 공유가 중요하다는 의견 ○ 세계적으로 분쟁 해결의 평화적 열쇠는 상호이익(mutual interest)이라고 할 수 있고, 북한과도 과학기술, 기후 문제, 신기술 분야 등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그 의지가 보인다는 의견 ○ 과학기술·보건의료 지식 교류 등을 위한 평화협력지구는 형식이나 공간에 구속될 필요 없고, 세계 각지에 남북이 마주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이 중요하다는 의견 ○ 다자간 기구,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중요한 바 국제협력 기획 및 증진팀에 기대가 크다는 의견 ○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통일부의 정상화, 평화와 교류협력, 개성공단 복원 등을 기대한다는 의견 ○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 조직으로 통합한 바, 북한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인권 관련 조직이 축소될 경우 북한 내 인권 탄압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 ○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나 국제적 여론 환기, 실질적 저지를 위한 노력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 통일부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에 대한 질의 ○ 범부처 통합활용 정원 운영방침(2022. 9.)에 따라, 러시아 통일주재관 임기 종료(2025. 2.) 후 배치되지 않은 실정인 바, 러시아의 지위를 고려할 때 부활 필요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련 질의 - 법률자문 결과 ‘법적 사업이 잔존하고 목적 달성 불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받았고, 재산을 해소할 때까지 청산법인으로 존재함. 현행 법률에 따르면 2천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재단을 해소할 수 없고 개성공단엔 남아있는 기업의 재산도 약 1조원인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개성공단 재산을 희생시킨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업무를 이관하고 공부 변경한 것은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없이 저지른 일로 심각한 법률관계 하자가 될 수 있음. 재단의 해산 경위 등을 살펴보고 남북경협 준비와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단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재단 해산은 이전 정부가 통일부 관련 기관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 사례이고,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었다는 지적 - 상위 법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행령 통치의 전형’ 사례이므로, 재단 해산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법무법인(태평양, 광장 등) 시행령 개정 의견 참고 필요 - 재단 해산 이후에도 청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 필요
기타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관련 - 군사정전협정(1953.7.27.)에 따른 군정위는 1994년 해체되었고, 유엔사령부의 DMZ 출입통제는 권한 범위(관할권이 아닌 관리권)를 이탈하여 우리 주권의 행사가 제약받고 있으므로, 유엔사 본연의 임무를 유지하되 입법불비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 - 군사정전위 대표(5명)를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여전히 임명하고 있으므로 해체되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진보정부는 물론 보수정부에서도 일관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는 의견 - 노태우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1988)에서 비무장지대 내 평화시 건설을, 김영삼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1997)에서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을, 이명박대통령은 ‘나들섬 프로젝트’를 (2009.8.), 박근혜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DMZ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는 등 보수정부가 진보정부보다 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지적 - 베를린장벽 해체 이후 동서독 접경지역을 생태지역으로 보존한 독일사례, 아마존강 접경지역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한 에콰도르-페루사례, 키프로스 협력 등을 참고하여 평화적 활용 계획 추진 필요 - 국제과제인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관련 질의 - 성공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조건으로 유리한 국제정세 확보가 중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한데, 군사정전위 해체가 현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질의 ○ 접경지역에서는 ‘평화’가 특히 중요한 바, 지난 정부에서 중지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위해 통일부가 선도적 노력 필요 ○ 무장화된 JSA판문점의 비무장화 필요 ○ 북한·통일연구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재정건전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폐지)된 것은 북한연구학계의 생태계 파괴라는 지적 ○ 북한학은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공공재 성격을 가졌지만, 대학 내 학과 통폐합, 정원 축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바, 인프라 확장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선도적 개입 필요 ○ 외국인이 국내에서 북한법을 전공하고 싶어도, 제도적 한계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 ○ 북중 접경지역의 신압록강대교 관련 질의 ○ 국유재산 관리 부실 관련 - 남북관계관리단(남북회담본부) 임차 관사(3곳)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 하나원 본원 체육관 신축을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 일부를 관리전환 받았으나, 주요보안시설(가급)임에도 경계 표시도 없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 ○ 총기탈취사건 등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무기고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 하나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설 보안등급이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하나원은 특수경비가 필요한 보안시설로 정기 조달계약을 통해 용역업체를 변경하고 있는 바, 보안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보다 직접 고용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나) 산하기관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 의료지원은 탈북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호응도 높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중도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 예산 수립 필요 ○ 탈북민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흐름이 좋아지는 추세인지 여부 질의 ○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이 잘 살아야 통일이 될 것이므로 잘 살피달라는 당부

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남북경협사업	○ 갑작스런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경협 참여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향후 공단 재가동 또는 경협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기존 기업 관리 등 적극적 역할 당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방안 마련 필요 ○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위촉과정에서 반평화통일 인사 배제 방안 마련 필요 ○ 위촉 후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반통일적 발언을 하는 위원에 대한 중도 해촉 방안 마련 필요 ○ 2023년 제3차 정책건의집에 포함된 적대적 흡수통일 방안은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행위로서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민주평통이 정치인의 선거 조직화되거나 지역 유지들의 친목·훈포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 지적 및 참신한 인사 참여 방안 마련 필요 ○ 자발적 활동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KPI 평가지표 개발 및 실질적 활동가 중심의 발굴·추천 시스템 구축 필요 ○ 10년째 동결된 부의장 정수 확대(25명→30명) 및 여성·청년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직능부의장 확충 필요
지역협의 회 운영	○ 2024년 개정된 국내 지역회의 운영규정에서 '평화'라는 용어의 삭제 경위 질의 및 즉각적인 복원 필요 ○ 지역협의회의 외유성 해외 견학 등 관행적 사업 탈피 및 헌법기관에 준하는 실질적 활동 전개 필요
사업 운영	○ 글로벌 전략 특위 등 주요 조직 구성 시 특정 이념 편향 인사 포함 문제점 지적 및 개선책 마련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글로벌 전략 특위 축사 영상에 내란옹호 발언 등을 한 인사가 출연하여 축사한 문제점 지적 ○ 시민 참여를 통한 통일 의식 고취 및 평화통일·민주교육 사업에 대한 관심 필요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보수·진보 통합적 정책 추진 필요 ○ 제19기부터 제21기까지 민주평통 회의 참여율 하락에도 해당 예산이 감액 없이 집행되는 문제 지적 ○ 의장 표창의 과도한 수량 문제 및 의장 표창을 개인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 대통령 표창으로 부각하여 이용하는 문제 지적 ○ 의장 표창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한 미활용 서약서 작성 및 이의 위반 시 수상 취소 등 엄격한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 통일부 추진 '사회적 대화' 사업과 민주평통의 역할 간 중복성 우려 및 두 기관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 필요

라. 재외동포청 소관

(가) 재외동포청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조직운영 및 제도개선	○ 국내체류동포의 사회적응 지원과 권익 신장을 위한 동포청의 책무를 강조하며, 조직개편, 인력·예산 확충, 부처 간 분절화 극복이 시급함을 지적 ○ 동포청 출범 2년이 지났음에도, 해외공관 내 동포업무 전담 인력이 과거 재단 시절(7명)보다 오히려 축소·소멸된 점을 지적하며, 조직 정비와 인력 보강 필요성 제기 ○ 재외동포 정의 관련 무국적자 포함 여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 제기 ○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동일한 입국심사대 이용이 제한되는 현장 문제에 대해 실태 확인 필요 ○ 서비스지원센터 자체감사 적발 사항의 원인을 질의하며 관리·운영 개선 필요성 제기 ○ 재외동포단체 지원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극우 성향 단체에 보조금 지원 사례 지적 ○ 동포단체 지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 기준 및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 ○ 재외동포 정의 관련,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기본법이 보다 포괄적 기준임에도, 타 부처 입법 시 법무부 재외동포법을 준용하는 관행이 지속되는바, 향후 재외동포 관련 입법에서 재외동포청 기준을 적용하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 타	○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노력 규정 신설에 대한 정부 견해 질의 ○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0세로 하향하는 법안 제출에 대한 의견 요청 ○ 해외입양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동포이자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이 구금·추방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 제기 ○ 특정 동포단체의 미국 FARA법 저촉 우려 보도와 관련하여 동포단체 지원 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캄보디아 교민 사회가 제기한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여행금지 조치 단계 하향 요구에 대해, 동포청과 정부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설명 필요 ○ 동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한 정부 내 동포업무 일원화 필요성 제기 및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리박스쿨 자매단체 KHHC에 2024~2025년 보조금 지원 사실 지적, 종교·국내 정치 관련 사업은 지원 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선정의 심사 부실 문제 제기 ○ 심의위원회 판단보다 재외공관 의견,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을 ‘파운딩 파더’로 평가해 온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사업 선정에 과도하게 반영된 점을 들어 재외동포청 사업 집행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구조의 객관성·중립성 훼손 지적 ○ 민주평통 임명 인사의 KHHC 활동 관여 및 차세대 극우 적극 후원 등을 위해 특임공관장과 재외동포청 사업을 악용한 조직적인 사건으로 진상 파악 필요

(나) 산하기관

1) 재외동포협력센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관 운영	○ 재외동포협력센터장과 관련된 인사 청탁 의혹 및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감사 또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7. 증인·참고인 명단 및 주요 신문내용

가. 기관증인

○ 외교부 본부 : 43인

직 위	성 명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국립외교원장	최형찬
외교전략정보본부장	(공석)
차관보	(공석)
대변인	이재웅
공공외교대사	정기홍
기획조정실장	(공석)
의전장	김태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권기환
경제외교조정관	김희상
기후변화대사	정기용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태우
외교안보연구소장	이문희
감사관	유영
부대변인	(공석)
조정기획관	문인석
정보관리기획관	강근형
인사기획관(기관감사)	황소진
인사기획관(종합감사)	조재홍
의전기획관	권재환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강영신

직 위	성 명
아세안국장	이동기
북미국장	홍지표
중남미국장	이주일
유럽국장	임형태
아프리카중동국장	정광용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한민영
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외교정보기획국	박장호
한반도정책국	백용진
국제안보국	윤종권
국립외교원기획부장	이문배
국립외교원교수부장	고재명

○ 통일부 : 12인

직 위	성 명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대변인	구병삼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통일협력국장	(공석)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국립통일교육원장	고영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승신
북한인권기록센터장	김선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4인

직 위	성 명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공석)
자문건의국장	박학민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 재외동포청 : 5인

직 위	성 명
청장	김경협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 한국국제협력단 : 5인

직 위	성 명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사업전략·지역사업 I 본부장	이윤영
지역사업 II 본부장	홍석화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장	손정미

○ 한국국제교류재단 : 3인

직 위	성 명
이사장	김기환
기획협력이사	우경하
교류협력이사	이종국

○ 재외동포협력센터 : 2인

직 위	성 명
센터장 상근이사	김영근 (공석)

○ 한·아프리카재단 : 2인

직 위	성 명
이사장 상근이사	김영채 감운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인

직 위	성 명
이사장 사무총장(이사장 직무대행)	(공석) 이주태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1인

직 위	성 명
회장	정낙근

【 아주반 】

○ 주필리핀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겸총영사 국방무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재외무관	이상화 상승만 조현철

○ 주일본대사관 : 10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 공사참사관겸총영사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겸문화원장 공사참사관겸영사 국방무관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주재관(산업통상자원) 주재관(문화홍보) 주재관(경찰) 재외무관	이혁 강명일 김장현 김현숙 나용욱 이선아 정경록 박영혜 이길호 지동욱

○ 주중국대사관 : 1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 공사 겸 총영사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노재현 김한규 김진동 이경덕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구태훈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류인식
공사참사관	주재관(산업통상자원)	박대규
공사참사관	주재관(과기정통방송)	이진수
공사참사관	주재관(환경)	조은희
공사참사관	주재관(국토교통)	오원만
공사참사관	주재관(재정경제금융)	배정훈
공사참사관겸문화원장	주재관(문화홍보)	김진곤
국방무관	재외무관	양윤철

○ 주상하이총영사관 : 3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외무공무원	김영준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최재하
영사	주재관(재정경제금융)	고재신

○ 주캄보디아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석)	(공석)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김현수
국방무관	재외무관	박형욱

○ 주베트남대사관 : 5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최영삼
공사참사관겸총영사	외무공무원	장호승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박승언
공사참사관	주재관(재정경제금융)	이재면
국방무관	재외무관	박정환

○ 주태국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박용민
공사참사관겸총영사	외무공무원	김남혁
국방무관	재외무관	구형준

○ 주라오스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정영수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이동규
국방무관	재외무관	박정근

【 미주반 】

○ 주미국대사관 : 1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대사	강경화
공사	외무공무원	이준호
공사	외무공무원	안세령
공사	외무공무원	김학조
공사겸총영사	외무공무원	조기중
공사참사관	주재관(문화홍보)	박종택
공사참사관	주재관(산업통상자원)	박찬기
공사참사관	주재관(보건복지식약)	김충환
공사참사관	주재관(농림축산)	김원일
공사참사관	주재관(재정경제금융)	최영전
공사참사관	주재관(교육)	강병구
공사참사관	주재관(공정거래)	김성근
국방무관	재외무관	윤형진

○ 주UN대표부 : 6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차지훈
차석대사	외무공무원	김상진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박준병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서민정
공사참사관	주재관(법무법제)	이수창
공사참사관	주재관(공공행정안전)	박경태

○ 주뉴욕총영사관 : 4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공석)	(공석)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이상호
부총영사	주재관(재정경제금융)	박문규
영사겸문화원장	주재관(문화홍보)	김천수

○ 주토론토총영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외무공무원	김영재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최기천

○ 주페루대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최종욱
국방무관	주재무관	박진희

○ 주브라질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최영한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박소연
국방무관	재외무관	이현국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이용수

○ 주칠레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김학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황정한
국방무관	주재무관	박병건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외무공무원	김영완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조성호
영사검문문화원장	주재관(문화홍보)	이해돈

○ 주샌프란시스코영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외무공무원	임정택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나상덕

○ 주밴쿠버총영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견종호 장영재

○ 주시애틀영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서은지 박미조

【 구주반 】

○ 주네덜란드대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홍석인
공사겸총영사	외무공무원	안혜정

○ 주독일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임상범
공사참사관겸문화원장	주재관(문화홍보)	양상근
국방무관	재외무관 (덴마크·오스트리아 겸임)	조보현

○ 주벨기에대사관(겸 주EU대사관 및 주NATO 대표부) : 4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유정현
공사겸총영사	외무공무원	강주연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옥별임
국방무관	재외무관 (네덜란드·룩셈부르크 겸임)	문동수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외무공무원	김은정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강대성

○ 주룩셈부르크대사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전영희

○ 주덴마크대사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이동렬

○ 주제네바대표부 : 8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윤성덕
차석대사	외무공무원	송시진
차석대사	외무공무원	최성요
공사참사관	주재관(농림축산)	강민철
공사참사관	주재관(보건복지식약)	황의수
공사참사관	주재관(산업통상자원)	허정수
공사참사관	주재관(재정경제금융)	신민철
공사참사관	주재관(법무법제)	신태훈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4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함상욱
차석대사	외무공무원	이경아
공사	외무공무원	이현정
공사참사관	주재관(과기정통방송)	이창선

○ 주모로코대사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윤연진

○ 주튀니지대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이태원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김성훈

○ 주튀르키예대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정연두
국방무관	재외무관	이심표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외무공무원	이우성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이경희

○ 주레바논대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전규석
국방무관	재외무관	이축복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 일반증인 : 없음

○ 참고인 : 2인

[출석일 및 장소 : 10.28.(화), 국회]

성 명	직업 (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 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여부
백원진	경찰청 경정 (前 캄보디아대사관 경찰영사)	외교부	캄보디아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 관련, 경찰영사 파견 경력자로서 재외국민 보호방안 청취	불출석 ¹⁾
이영환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대표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출석

1) 前 캄보디아대사관 경찰영사, 現 경찰청 경정(동대문경찰서 정보과장), APEC 국가 행사 관련 경찰비상업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함.

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주요 신문내용

대상	주요 신문내용
이영환 전환기정의위킹 그룹(TJWC) 대표	○ 국제사회에서 인권개선 활동을 하면서, 북한인권보고서공개 발간이 국제사회에 미친 반향에 대해 느낀점 질의 ○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초기, 북한인권보고서가 비공개로 결정된 이유 관련 질의 ○ 국내외 인권활동가 등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점 등 질의 ○ 참고인이 감수한 2024년도 보고서 중 사실 왜곡 부분에 대한 질의 ○ 2025년도 보고서도 실무차원에서 발간 준비가 되었지만 비공개로 결정됨. 지속적으로 공개·활용되어야만 유엔 인권결의 등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북한이 선별적으로라도 지적이나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의견 ○ 북한처럼 인도적 ‘위기’가 있는 곳에서 인권과 인도주의가 탈정치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다자간 협력구조 또는 민간이 더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

8.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외교부 소관

(가) 외교부

1) 본 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미 관세협상 및 대미 투자 논의와 관련하여, 협상 경과와 정부 입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히 설명할 것
-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그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미국 이민당국(ICE·CBP)의 자의적 해석으로 발생한 문제 사례와 관련하여, 해석상 애매한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해 한미 간 명확히 합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주한미국대사관 내 미국 투자데스크 설치와 관련하여, 미측의 데스크가 실제 현장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 B-1 비자로 포섭되지 않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 비자 신설 필요성과 관련하여,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
- 주한미국대사관의 장기간 무상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 임차료 면제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JDZ) 협정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쟁점과 종료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 입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한 외교적 대응에 노력할 것
- 대러 제재 동참으로 인한 우리 기업·교민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해 완화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 등 제재로 인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 캄보디아 ODA 사업이 급증한 배경과 추진 경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
- ODA 사업 중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심사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초기 대응 및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 내역을 보고할 것
- 캄보디아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경찰주재관·영사 인력 증원 등 실효성 있는 현지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경찰,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선도적으로 협조 요청할 것
- 재외국민 사건·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재외국민 보호 조직의 기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중장기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김해국제공항에 긴급여권 발급 창구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많으므로 향후 설치 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
- 재외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 입양 동포 중 시민권 미취득자의 구금·추방 문제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민원서식 부재 및 여권안내 홈페이지 접근성 미흡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 계획 마련할 것
- 재외공관 도청탐지 장비 보유 현황, 점검 주기 및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
- 신안보·경제안보·기술협력 등 융복합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외공관 기능 강화 및 AI 전담 조직 상설화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할 것
- 공관장 공식 장기화, 재외국민 보호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력 확충 및 조직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임공관장 인선의 투명성과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KOICA 직제 규정 위반 사례 및 보좌관실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교육비 전용 등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 재단 이사장의 국내외 출장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보고할 것
- 마스가 프로젝트 등 한미 조선 협력 논의 관련, 국내 기업의 미국 군함 제조 참여 및 향후 우리나라의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 확대를 위한 법적 제약 해소 등 전략적 외교 노력을 강화할 것
- 한미 관세협상이 국가 경제·외환시장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APEC 시한에 쫓긴 졸속 타결을 경계하고, 상호 이익·상업적 합리성·시장 충격 최소화라는 협상 원칙을 끝까지 견지할 것
-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별 관세 시도 관련, 정확하게 파악 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것

- 양자 ODA 시 국가 브랜드 실종, 분절화 문제 극복을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국가 표식과 문구를 더욱 부각시킬 것
- 특검 수사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절차가 거의 중단됐는데, 특검 관련한 ODA가 아닌 경우 중단 해제를 검토할 것
- 디지털 헬스, 감염병 대응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보건 분야에서 실질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 ODA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
- 캄보디아 내 범죄 관련 국민 다수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할 것
- 캄보디아 내 범죄 문제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제도적·현장 중심 대응과 함께 '코리아 데스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캄보디아 단속 강화에 따른 태국·라오스·미얀마 등 인접국으로의 범죄 확산 우려에 중국 공안, 메콩 5개국 등 APEC 역내 차원의 안전 협의체 구성 및 다자 공조 체계를 추진할 것
- 캄보디아 공관장 3개월 이상 공석 상태로 정식 대사를 신속히 임명할 것
-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수배 중인 자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정상적 취업 절차 없이 동남아 개도국 진출 시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안내할 것
- 캄보디아 사태 등에 현행 규정상 긴급지원비의 적극적 활용이 불가능바,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
- 캄보디아 내 범죄사례는 국제사회에서 정의하는 전형적 인신매매와 일치하는바, 캄보디아 문제 해결 시 국제 인신매매 프로토콜에 따른 다국적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적용할 것
- APEC 경주선언 채택 이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외교부 내 AI 전

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상설화할 것

- 캄보디아 내 한국 사람들 중 불체자들이 과태료·항공권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 당국과 협력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
- 고물가 지역 파견 외교관들에 대한 활동비 현실화 미흡으로 실질적 활동 제약이 발생하는바, 외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예산에 반영할 것
- 젊고 유능한 외교 인재 육성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 진단 및 처우 개선·조직 혁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교부 전체 성비는 5대5 수준이나 대사급은 173명 중 여성 8명(4.6%)에 불과한바, 여성 대사 확대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외교 수단으로 적극 검토할 것
- 경제외교 역량강화를 위해 외교부 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한반도 평화외교 관련,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된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한·중남미재단 설립을 검토할 것
- 강제동원 공탁 과정에서 가짜 인감 사용 관련, 외교부 내부 관여 의혹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
- 서해 구조물 관련, 행정 당국 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국민 정서와 국제법·한중어업협정을 근거로 정식 대응할 것
-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데이터를 보강하고 확산하는 데 집중한 AI 대응형 데이터 외교정책을 마련할 것
- 총리실, 대통령비서실의 의전실 인원 구성 문제 관련, 김건희 여사의 의전을 위해 활용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대통령 해외순방 시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 설치 관련 진상을 규명할 것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본부 채용 합격을 취소할 것

2) 주필리핀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필리핀 방산 수출 추진 시, 장기 무이자 차관 등 불리한 계약 조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간병·돌봄 등 대체 가능한 인력 협력 모델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코피노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친부모 찾기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대사관의 적극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3) 주일본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SNS상 혐한 콘텐츠 및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 혐한 움직임이 오프라인 시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일본 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예방적 대응을 강화할 것
- 워킹홀리데이 전담 상담원 운영 실태 및 상담 내용을 점검하고 소통·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보완할 것
- 사도광산, 조세이탄광, 우키시마호 등 과거사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항의 위주의 대응을 넘어 일본 내 시민단체·연구자 등과의 교류를 포함한 공공외교를 병행할 것
-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 확인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 1,140명의 미지급 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명부 확보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

- 조세이탄광 및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하여, 한일 협력 하에 인도주의적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본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
- 나가사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추모비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일본 측에 요청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 관련 실태 파악 및 조사 필요성을 본부에 건의할 것
- 한일 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연장 및 상시화 가능성을 일본 측과 지속 협의할 것
- 일본 내 도서지역 조난자 발생 시 민간 구조헬기 임차 등 보완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주중국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위급 교류 및 실무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에 대한 결례나 불합리한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분명히 전달할 것
- 중국 주재 공관과 본부 간 공문 수발신 감소와 관련하여, 외교 활동의 실질적 성과 보고의 충실성을 종합 점검하고 한중관계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보고 기능을 강화할 것
- 중국 내 K-POP 공연 및 문화교류 제한과 관련하여, 대규모 문화공연 재개를 위한 중측과의 협의 지속 추진 및 대중문화 외에도 전통·클래식 등 다양한 문화교류 채널을 적극 발굴할 것
- 보이스포싱 등 초국경범죄가 집중된 지역에 경찰협력관 추가 파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것
-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초국경범죄 대응 협력 동향과 관련하여 필요 시 중국과의 치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 서해 중국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 접촉 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과 국내 우려를 명확히 전달할 것
-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다자 계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대응 철저히 할 것
- 중국의 반간첩법 적용 사례 및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국민의 신체·재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보고할 것
- 중국 내 납치·감금 등 사건 사고 중 미제 사건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점검하여 본부에 서면 보고할 것
-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현황 관련, 수감자 수를 범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정기적인 현황 업데이트 및 추가 보고를 실시할 것
- 재외동포 담당 영사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외국민 및 동포 보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
- 여행 안전 관련 공지 및 안내 시, 공지내용이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표현과 전달 방식 더 세심히 검토할 것과 언론보도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것

5) 주상하이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증 업무 급증에 대비, 사증 업무량·불법체류율·비자신청센터 운영 실태 등을 근거로 객관적인 인력·예산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관의 안내 및 공지가 방문을 위축시키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주캄보디아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캄보디아 내 스캠·인신매매·감금 관련

-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검거·구금된 인원 에 대한 국적별·사안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할 것
- 우리 국민 구금·감금 실태에 대한 신뢰 가능한 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스캠 단지 탈출 우리 국민에 대한 문전박대·소극적 대응 논란 관련

- 업무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위기 상황 시 즉각 보호·접수 원칙 명확히 하고 공관 출입·초기 응대 절차 전면 점검·개선할 것

○ 의원실 등 외부 주체의 의해 구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 관련,

- 의원실·관계기관과의 협조 경과를 명확히 정리·보고할 것
-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공관 주도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

○ 로맨스스캠 적색수배자 대응 관련

- 적색수배자의 여권·영사 민원 처리 기준 재정비할 것
- 자수 권고, 송환 가능성, 본부 및 수사기관과의 협조 절차를 재검토하고 명확히 할 것

○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고 관련, 접수 주체(본인·가족)·피해 유형(납치·감금·취업사기)·처리 단계별로 체계적 분류 자료를 제출할 것

○ 미결 사건의 원인(소재 미확인, 협조 부족 등)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

○ 박모 씨 사망 사건 관련

- 최초 인지 시점부터 1·2·3차 보고 시점 및 보고 내용을 명확히 정리·제출할 것
 - 사인 추정, 구타 흔적, 납치 여부 등 핵심 정보가 축소·지연 보고되지 않도록 보고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
- 대사 공석 장기화 관련
- 대사대리의 대외 접촉 범위 및 한계 명확히 정리, 대사 공석이 고위급 소통·치안 협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본부에 보고할 것
 - 신임 대사의 조속한 부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것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중국계 조직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 관련, 중국계 범죄조직 및 현지 유착 구조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하고 필요 시 한·중 및 한·캄 간 치안 협력 강화를 본부에 건의할 것
- 여행경보 및 여행금지 조치 관련
- 교민 거주 지역과 범죄 다발 지역을 구분한 정밀 위험 평가 실시, 여행금지 조치가 교민 생계·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여 본부에 보고할 것
- 스캠 피해 예방 및 사전 차단 위해 캄보디아 입·출국 동향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층 대상 취업사기·스캠 정보를 강화할 것
- 재외국민 보호 업무 급증 대응 관련, 경찰협력관 추가 증원 효과 점검 및 영사·행정 인력의 업무 과중 실태 분석하여 중장기 인력 확충 방안 마련할 것
- 여권·자금·연고가 없는 피해자(사실상 무연고자) 지원 관련, 공관 차원의 지원 기준 명확화 및 담당자 개인 부담에 의존하는 관행 개선할 제도적 보완책 마련할 것
- 캄보디아 치안 역량 강화 위해 코리안데스크, 합동 TF 등 기존 협력 틀 실질화, 치안·교육·수사 역량 강화 포함한 ODA 연계 방안 본부와 협의할 것
-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본부 보고의 적시성·충실성에 대한 내부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

7) 주베트남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베트남 또 럽 당서기장이 한국 국민 방한 직후 북한을 방문한 배경과 의미, 그리고 베트남의 남·북한 병행 외교 노선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외교적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 최근 호치민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 현지 치안 당국과의 협력, 우리 국민 대상 예방 안내를 강화할 것

8) 주태국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 23회 직항편이 운항 중인 치앙마이 지역에 대해 분소 또는 영사 기능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국가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내 출국 공항 단계에서 출국 심사 및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주미국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3,500억불 대미투자 실행방안 관련 3년 이내 업프런트(upfront)로 지불할지, 분납할지에 대해 진전된 상황 관련 대사가 보고받은 바를 보고할 것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살펴보고 보고할 것
- 조선 협력 관련 최근 미국 내에서 발의되는 법들에 대해 어떤 역학이 작동되고 있는지 각 지역구의 특색을 감안하여 살펴볼 것
- 미국의 조선 관련 법률 문제에 있어 한정된 영구적인 예외 조항은 태스크포스에서 검토 후 해당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
- 공관의 영사 관련 매뉴얼 관련, 영사조력의 한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 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보여줄 것
-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만들 것
-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관련, 공장 등 현장에서의 재하청 문제 등에 대해 공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기업 및 당국과 소통할 것
- 한화 자회사 등이 MASGA 프로젝트 관련하여 중국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것이 아닌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
-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우리 유학생에 대한 미 당국의 SEVIS 종료 통보 등에 대한 초기 법률 자문 등 조력 현황을 보고할 것
- 주재관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업무성과 평가 구체화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미국 내 진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무슨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 파악할 것

10) 주유엔대표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제재 하 인도주의적 교류 및 인도주의적 면제 조항 등 국제무대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11) 주뉴욕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관에 대한 구글지도상 리뷰 관련,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을 체계적으로 챙길 것
-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관련 교민들의 불편 및 불안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
- 한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총영사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 셀트리온의 뉴저지 공장 인수 관련 시설 변경 및 증설 과정에서 조지아 주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 뉴욕시의 단기 렌트 규제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

12) 주토론토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관련, 법 제도 완비 전이라도 해당 동포들의 불편함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할 것
-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고지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지 경찰과 협조하는 등 방법을 강구할 것
- 재외공관의 업무 수요와 관련하여 현지의 의견을 본부에 보고할 것

13) 주페루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리마 메트로 3·4호선 건설 수주를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공관 차원에서 노력할 것
- ODA 사업의 분절화 방지를 위해 공관 차원에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구체적 관련 제언을 보고할 것

14) 주브라질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상파울루총영사관과 함께 방안을 논의할 것
- 브라질의 주요 인사들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일 것

- MERCOSUR와의 무역협정 단절 관련,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공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공관이 브라질 현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허브 역할을 할 것
- 브라질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관련, 양국 청년 사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살펴볼 것
- 총영사관 수요 및 공관 내 인력 증원 수요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여 본부에 제안할 것

15)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우리 정부가 보유한 야파마우까 농장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민할 것
- 한-아르헨티나 사이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질 것
- 아르헨티나 정국 상황 관련, 대규모투자촉진제도(RIGI)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대해 공관이 면밀히 살펴볼 것

16) 주칠레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속가능한 광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칠레 정부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볼 것

17)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민 사회 세대 교체에 따른 지역별 센터 중심 영사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총영사관 건물 신축 시 교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어 쉽게 찾아오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할 것
- 미국 ICE 단속 관련 우리 교민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영사 조력 등 교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No King” 시위 등 현지 시위 발생 관련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현지 치안 등을 즉각적으로 수집하여 본부와 소통 후 정리하여 유사시 재외국민들에게 알리는 네트워크 체계도 점검할 것
- 프로보노 제도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교민 안전 공지 등에 총영사관/출장소 대표전화 및 긴급전화 등을 표시하는 등 교민들에게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CBP, ICE 등 관계 당국과 꾸준한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으로 이를 제도화할 것
- 문화·예술 인력 관련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볼 것
- 등록 유권자 수 관련 오해가 없도록 향후 관리에 유의할 것
-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억울하게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것
- 한미 경험의 최전선으로서 현지 진출 기업 간 민간협회 및 KOTRA 등 기관의 지원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컨트롤타워로 자리잡을 것
- 공관 내 예산 및 인력 부족 현황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 홍사단 본부 리노베이션 관련 보훈부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살펴볼 것
- 총영사관의 대외활동 건수 및 재외공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이 감소하지 않도록 활발한 외교활동을 진행할 것

18)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민 사회 세대 교체에 따른 센터 중심 영사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No Kings” 시위 등 현지 시위 발생 관련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현지 치안 등을 즉각적으로 수집하여 본부와 소통 후 정리하여 유사시 재외국민들에게 알리는 네트워크 체계도 점검할 것
- 프로보노 제도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CBP, ICE 등 관계 당국과 꾸준한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
- AI 네트워킹 생태계 지원 관련 구체적인 수치 자료 및 성과 실적을 제출할 것
- 전문과학관 확대를 통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거점공관의 역할을 다 할 것
- K-Food 진출을 위해 미국 급식 내 한식 보급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벤처캐피탈 중심 투자 생태계 조성 전략 관련 국가 전략보고서 발간을 고민할 것
-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억울하게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것

- 샌프란시스코 내 한인타운 설립 관련하여 방안을 고민할 것
- 총영사관의 대외활동 건수 및 재외공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이 감소하지 않도록 활발한 외교활동을 진행할 것

19) 주밴쿠버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관이 북극항로 협력의 최전선에서 캐나다 산·학·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에너지 기술력을 외교적 자산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 SIN(Social Insurance Number) 관련, 동명이인 오인 문제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할 것
- 주정부 주요 인사와의 긴밀한 소통 및 방한 추진을 이어나갈 것
- 밴쿠버총영사관이 캐나다 서부 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FTA 이후 시대의 통상 외교를 선도할 것
- 교육원 설립 관련 교육부 및 외교부 본부에 보고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
- 캐나다 LNG 2단계 사업 관련 현지 상황을 확인하여 정보를 취합·보고할 것
- 워킹홀리데이 관련 강력범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20) 주시애틀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미 경제협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도시로서, 시애틀총영사관이 현지의 첨단 산업과 대한민국 미래 인프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
- 공관 예산현황 중 기본경비와 주요 행사 등 사업비 외 다른 항목에 대한 내역을 제출할 것
- 주정부 주요 인사와의 긴밀한 소통 및 방한 추진을 이어나갈 것
- 영사관 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워싱턴주 한인 교민 상대 폰지형 금융사기 예방에 관심을 가질 것
- 포틀랜드 및 시애틀 등 관할지 내 현지 동향 및 치안 상황을 본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유사시 재외국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려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
- 빌게이츠재단과의 소통을 통해 국제 보건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 관할지 내 미등록 재외국민 비율이 높은 것 관련, 현장에서의 제도적 개선 가능사항에 대한 제언을 강구할 것
- 과학기술주재관 파견 또는 과학기술전문관 제도 강화 등 과학기술외교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영사 업무 관련 소통 어려움 등 후기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를 가질 것

21) 주네덜란드대사관겸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 헤이그 소재 국제기구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할 것

22) 주독일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23)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상세내용을 제출할 것

24)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 관할지역 우리 국민 대상 범죄(물리적 범죄 등) 관련 통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서면 제출할 것

25)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 룩셈부르크 소재 금융기업 등 다국적기업에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할 것

26) 주덴마크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27)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현황 및 이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 자료 제출할 것
- 다자외교에서 국익증진 방안 마련하여 자료 제출할 것
- 2025.9월 제출된 OHCHR의 북한인권 포괄적 보고서 제출할 것

28)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강화 방안, 건의·애로사항을 파악해 보고할 것
- 우리 다자외교의 지평을 키우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

- 주재국 내 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술 현황을 정리해 제출할 것
- 오스트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공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 적극 공유할 것

29) 주모로코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K-ETA 불허에 따른 비자 신청 급증 등 영사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인력 보강 등 대응방안을 검토·추진할 것

30) 주튀니지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식 물가지표와 시장 체감물가 간 괴리 등 현지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직원 처우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안정적 인력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31) 주튀르키예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관 인력 감축 경위 및 현지 업무수요(치안·영사 등)를 고려한 인력 확충/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32)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임차료 상한 및 공무원여비규정상 급지 조정과 관련하여 본부 협의 및 점검을 지속할 것

33) 주레바논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시리아 관련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의 예외 기준 표준화 작업을 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 방향을 의원실과 공유할 것

(나) 산하기관

1) 한국국제협력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없음

2) 한국국제교류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역점사업인 해외 정책연구 지원 사업 결과물 및 연구보고서를 전문가 및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 및 정부 정책연구포털에 공개할 것

3) 한·아프리카 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없음

나. 통일부 소관

(가) 통일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권 변동에 상관없이 일관된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할 것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할 것
- 위성정보센터의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할 것
- 기존 북한인권센터 건립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
-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 관련,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 북한 억류 선교사들과 비전향장기수를 교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42년간 복역한 안○섭의 무조건적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
- 북한인권 업무 축소와 묵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상의 용인이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
- 북한인권 관련 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이관 여부를 검토할 것
- 북한이탈주민 관련 용어 변경(북향민 등) 추진을 신중히 할 것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데이터, 취약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통일교육원의 교수 업무평가가 정량적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부적절한 활동을 한 통일교육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해촉할 것

-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북한배경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들의 예산 집행 및 관리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할 것
- 교육부와 협의하여, 관리감독 기관 일원화 등 북한배경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조직개편 관련, 범정부 대책으로 기존 우수인력을 충원하거나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 주러 통일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복원 조치할 것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복원하고 예산을 확대할 것
- 북한학과 육성을 위한 방안 검토 후 보고할 것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할 것
- 북한저작권을 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공탁금 등에 대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북한산 주류(2종) 반입 관련, 대북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것
- 북한도 관심을 보이는 SDGs협력, 다자협력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남북관계관리단(남북회담본부) 임차 관사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하나원의 보안시설등급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무기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하나원 경비 인력의 직접 고용 전환을 검토할 것

(나) 산하기관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탈북민 의료지원 사업이 중도에 마감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수립할 것

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개성공단 및 경협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경협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방안을 마련할 것
-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자문위원 위촉과정에서 반평화통일 인사 배제 방안 및 위촉 후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반통일적 발언을 하는 위원에 대한 중도 해촉 방안을 마련할 것
- 2023년 제3차 정책건의집에 포함된 적대적 흡수통일 방안은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행위인 바,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민주평통이 정치인의 선거 조직화되거나 지역 유지들의 친목·훈포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 개선과 참신한 인사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 2024년 개정된 국내 지역회의 운영규정에서 삭제된 '평화'라는 용어를 즉각 복원할 것
- 글로벌 전략 특위 등 주요 조직 구성 시 특정 이념 편향 인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장 표창을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 취소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

라. 재외동포청 소관

(가) 재외동포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 절차를 내실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정부 내 동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추진할 것
- 국내체류동포의 사회적응 지원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관련 조직 개편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과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동일한 입국심사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대해 직접 점검할 것
-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해외 공관에서 사라진 동포업무 전담인력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입양 동포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자체감사 결과 적발 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재외동포단체 지원 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유의할 것
- 재외동포 정의 관련,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기본법이 보다 포괄적 기준임에도, 타

부처 입법 시 법무부 재외동포법을 준용하는 관행이 지속되는바, 향후 재외동포 관련 입법에서 재외동포청 기준을 적용하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나) 산하기관

1) 재외동포협력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없음